Issue Paper

2004. 12.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목차

요약

Ⅰ.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

Ⅱ. 기업입지요인 분석의 틀

Ⅲ.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GIS)

Ⅳ. 투자사례를 통한 입지결정요인 분석

Ⅴ. 정책제언

작성 : 박용규 수석연구원(3780-8259)
seripyg@seri.org

감수 : 이언오 연구위원(3780-8101)
serileo@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Executive Summary 》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와 지역별 산업 생산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은 산업 공동화로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나 민간 부문의 참여나 니즈 반영은 미흡하며 정책적 효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입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각 지역의 입지적 장점과 비교우위를 활용하되, 동북아 글로벌 경쟁구도 하에서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 활동은 지역적으로 편중이 심하며 '경로 의존적(path-dependent)'인 발전 경향이 강하다. 즉, 기존의 경제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활동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통산업보다는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양호한 혁신환경을 창업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면서 지방의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지역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최근의 기업투자 사례에서는 핵심적인 입지요인이 투자입지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경쟁구도 등 지정학적 요인, 관련 산업의 집적이익을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이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유치 마케팅,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복잡한 입지요인들의 수준을 골고루 향상시키기 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요인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효과적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필수적이다. 수도권에서는 비용 최소화, 비수도권에서는 가치 극대화를 위한 입지정책이 필요하다. 동북아 주변지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권역의 확대 및 특화전략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은 지방의 기업 활력 제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방식의 다양화로 입지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핵심적이고 소프트한 입지요인 확충,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방 대도시 주변지역에 제조업 입지 공간 확보,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간의 입지적 연계 강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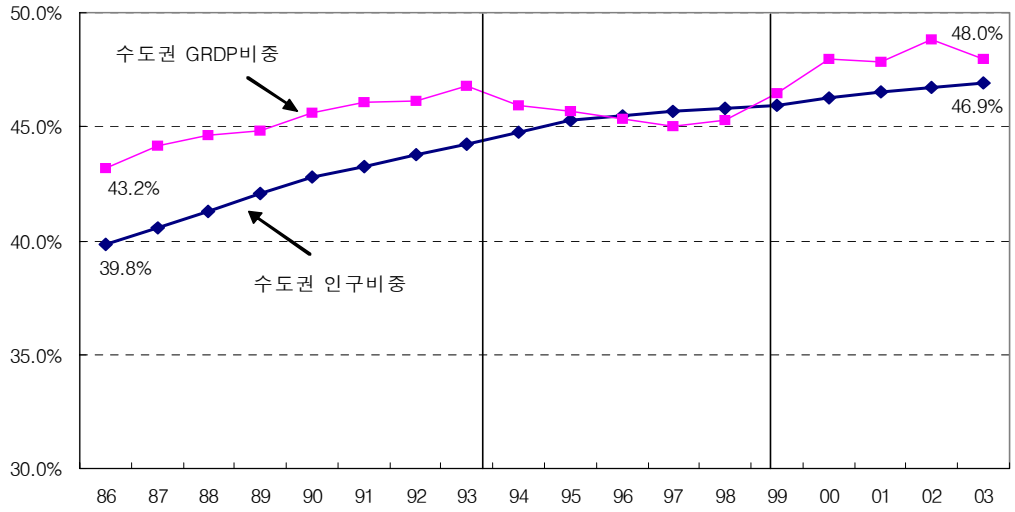
《 요 약 》

Ⅰ.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

□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와 지역별 산업 생산의 양극화가 지속

-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다시 상승(2002년 48.0%)
  ·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1987년 40%를 돌파한 이후 계속 높아져 2002년에는 46.7%를 차지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총생산 및 인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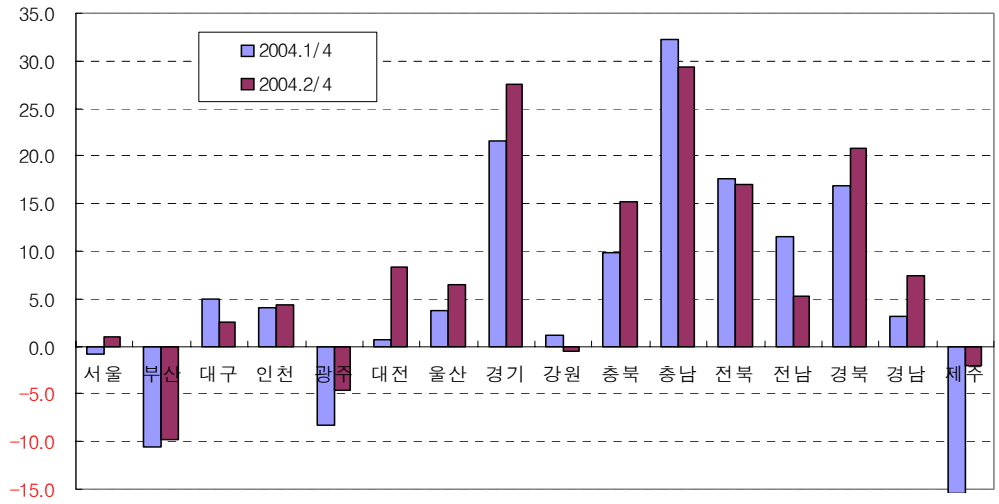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경기와 충남지역의 2004년 상반기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했으며 경북, 전북, 충북 등의 지역에서 비교적 증가율이 높음
  · 반면에 부산, 광주, 강원, 제주 등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대구, 인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산업생산 증가율이 정체

□ 지방의 산업 공동화 심화로 소득감소 및 실업을 야기

- 섬유 및 신발산업, 가전, 일반 전자부품, 공작기계 분야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

지역별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 통계청

□ 정부는 강도 높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중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2008년까지 국비 44.5조원, 지방비 14.4조원, 민자 7.6조원 등 총 66.6조원을 투입할 예정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재원 소요(04~08)

	총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665,732 (100.0)	108,562	123,164	133,708	143,940	156,358
국 비	445,349 (66.9)	74,155	81,773	89,111	96,314	103,996
지방비	144,273 (21.7)	26,400	27,350	28,276	29,995	32,252
민 자	76,110 (11.4)	8,007	14,041	16,321	17,631	20,110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 반면에 민간부분의 지역개발 참여나 니즈 반영은 미흡

-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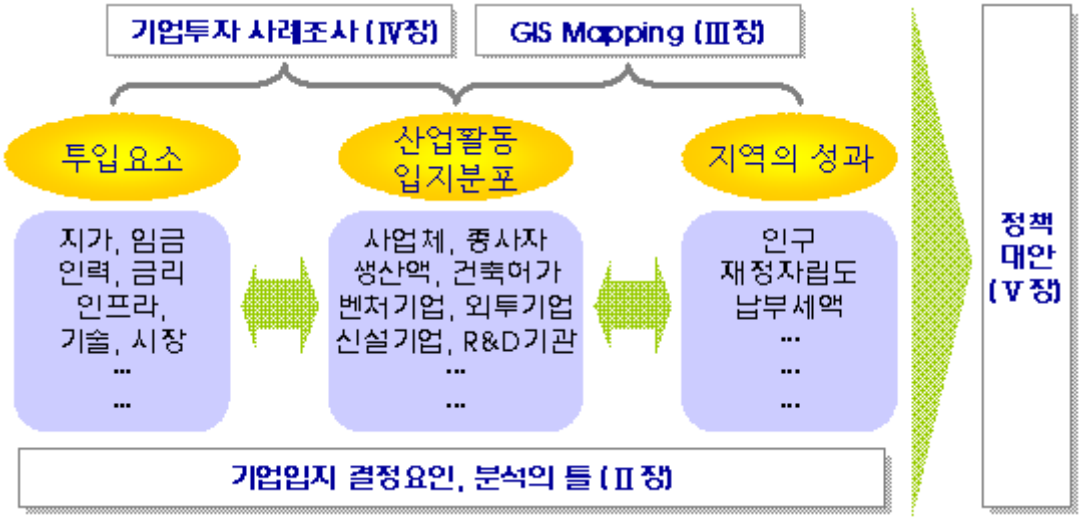
- 투자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 중이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않음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의 입지 경쟁력 강화가 시급

-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입지 경쟁력 강화가 절실

- 각 지역의 입지적 장점과 비교우위를 활용하되, 동북아의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의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할 시점

입지 경쟁력 정책과제 연구 프로세스



Ⅱ. 기업입지요인 분석의 틀

□ 지가, 임금, 인프라, 기술 등 투입요소의 차이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투입요소와 행태적·정책적 요소가 결합,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

□ 기업의 입지 분포는 사업체의 입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과 기타 업종이나 성장단계별 특별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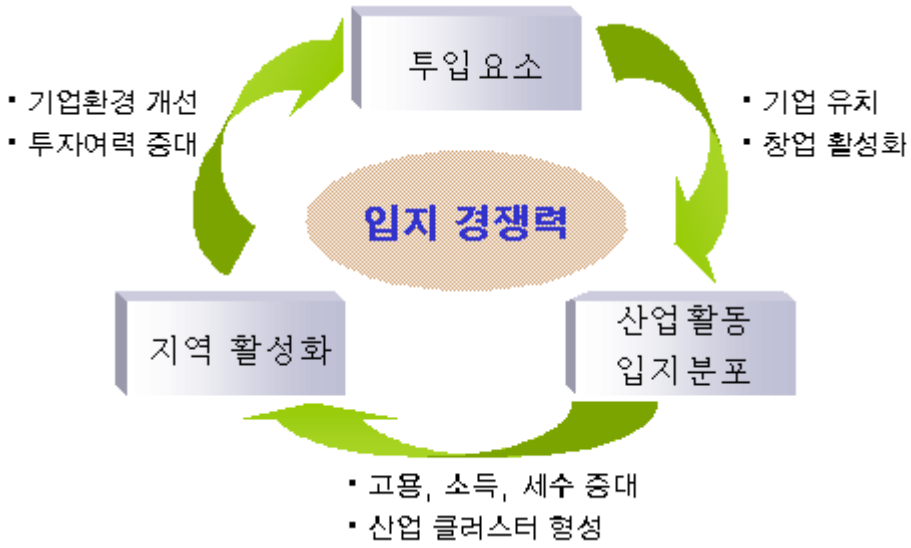
- 핵심 지표의 경우 특정 시점간의 입지분포 패턴을 GIS Map을 통해서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

- 기업, 산업의 입지로 인한 지역활성화 성과를 인구, 소득, 세수 등을 통하여 확인

□ 기업의 입지분포와 성과지표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어떠한 요인이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를 도출

- 통계적 상관성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하여 보완

입지 경쟁력 분석의 틀



Ⅲ.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 산업 활동의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경로의존적(path-dependent)'인 발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

- 일반 제조업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이 나타남

- 새로운 산업 거점이 등장하기 보다는 기존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경제권역이 확산되는 현상이 뚜렷

산업 활동의 공간 분포 요약

	분포비율		시·군·구 평균		분포 특징(핵심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제조업 사업체수	56.3%	43.7%	962개	287개	서울-대전축, 남동권 해안·내륙 지역
증감률 (%, 90-02)	55.5%	60.5%	-	-	수도권 남부, 서울-대전축, 울산·대구 주변지역
증감규모 (개, 90-02)	55.3%	44.7%	343개	107개	수도권 남부, 인천 남부, 경남 창원·김해, 충남 천안
제조업 종사자 비율	-	-	6.3%	5.2%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동남권 대도시 주변
비율변화 (%p, 90-02)	-	-	-2.89%p	-0.05%p	수도권 동남부·북부, 부산·대구 주변, 김해·구미 등
제조업 인당 생산액	-	-	166.7 백만/인	198.0 백만/인	인천 동남부, 경기 서북부, 경북 포항·구미, 전남 여수·광양, 충남 서산, 울산 남구 등
증감 (90-02)	-	-	119.0 백만/인	143.3 백만/인	생산액 분포와 유사
광공업용 건축허가(02)	24.1%	75.9%	6,081㎡	7,350㎡	충청권 북부지역, 인천 남동구, 경기 남동, 대전, 강원 원주시
상위 1,000대 기업분포	72.6%	27.4%	11.0개	1.6개	서울 도심·강남권, 경남 창원·마산, 경북 구미·포항, 충남 천안
벤처기업 (2004)	69.5%	30.5%	86.4개	14.9개	서울-대전축, 동남권 해안·내륙 등 1+2 분포 패턴
신설기업 ('04 상반기)	80.1%	19.9%	21.3개	2.1개	수도권 1극 분포, 서울 강남권과 도심, 일부 지방 대도시
외국인 투자기업	78.9%	21.1%	38.0개	4.0개	서울-대전축·동남권 해안 등 2극 분포, 서울 강남권, 경기 남부, 충남 천안, 경남 창원·마산
기업 부설 연구소	72.9%	27.1%	108.2개	15.8개	서울-대전축, 동남권 해안·내륙 등 1+2 분포 패턴(벤처기업 분포와 유사)

□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음

□ 산업 활동의 공간적 집중에 따른 지역별 재정력과 소득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

산업 활동 성과지표의 공간 분포 요약

	분포비율		시·군·구 평균		분포 특징(핵심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분포 (2002)	47.2%	52.8%	346.6 천명	152.6 천명	제조업 사업체 분포와 유사,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도가 높음
증감률 (91-02)	-	-	19.7%	3.6%	경기도 전역, 충청권 북부, 동남권 울산·부산 외곽, 대도시 도심과 군지역은 대부분 감소
재정자립도 (2002)	-	-	서울 95.6%	전남 20.8%	서울 도심·강남권, 경기, 광역도지역은 매우 낮음(10% 이하)
증감 (90-02)	-	-	-	-	서울 강남권·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 지방중소도시들은 30% 이상 대폭 하락
인당 납부세액	-	-	172.0 천원/인	112.7 천원/인	서울 도심·강남권, 수도권 남부, 지방의 제조업 중심도시

□ 제조업 사업체수의 분포는 인구와 인구 증감률,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성(0.5내외)을 보임

- 사업체수가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 역시 상관성이 있음(0.41)

□ 중·대기업인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분포는 인구 보다는 지방의 재정력이나 인당 납부세액 등 소득관련 지표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남

- 상위 1,000대 기업 분포와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계수는 0.58, 인당 납부세액과는 0.77로서 매우 높음

주요 지표간의 상관계수

성과변수 / 주요 설명변수	인구 (02)	인구 증감률 (91-02)	재정자립도 (02)	재정자립도 변화 (90-02)	인당 납부세액 (03)
사업체수(02)	0.53	0.45	0.54	0.10	0.24
사업체수 증감(90-02)	0.26	0.41	0.32	0.06	0.11
종사자수(02)	0.53	0.53	0.55	-0.05	0.09
생산액(02)	0.39	0.43	0.47	-0.15	0.05
인당 생산액(02)	0.04	0.13	0.10	-0.19	-0.01
건축허가(02)	0.04	0.10	0.02	-0.06	-0.03
상위 1,000대 기업수(04)	0.28	0.07	0.58	0.13	0.77
벤처기업(04)	0.51	0.28	0.59	0.15	0.32
신설기업(04, 상반기)	0.44	0.10	0.60	0.25	0.55
외투기업(04)	0.27	0.09	0.52	0.11	0.62
기업부설 연구소수(03)	0.49	0.27	0.59	0.12	0.32

□ 기업이나 산업의 입지 패턴은 그것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산업입지의 이러한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 발전 패턴은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도 유사한 맥락

□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 기업이나 산업 활동의 입지는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단계이며,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임

-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에 있어서 클러스터의 이점이 점점 더 강하게 작용

- 70~80년대의 산업입지 패러다임으로는 지방의 새로운 발전 거점이나 발전축을 형성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고 있음

Ⅳ. 투자사례를 통한 입지결정요인 분석

□ 최근 지역별 주요 투자사례를 선정,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

- 삼성전자 생활가전라인의 광주 이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의 제주도 이전, LG필립스의 파주 LCD공장 신설, 충남의 자동차 부품업체 유치 등

□ 지정학적 입지요인

- 고속도로와 공항, 항만과의 인접성 등은 기업의 물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LG필립스 LCD공장은 남북교류가 확대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파주 LCD 공장부지와 북한 개성과의 거리는 15㎞에 불과

□ 클러스터의 이점

- 관련 산업이 얼마나 클러스터화 되어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입지가 결정되며, 특히 부품산업의 경우 납품 기업과 관련 연구소 등의 위치가 중요

- 파주~수원~평택에 세계 최고의 LCD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경기도는 지난 2년간 50개 해외기업으로부터 118억 7,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
  · 삼성, LG 등이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한 결과, 이들 기업에 부품 원료 등을 납품하는 해외 기업들이 인접한 지역에 직접 공장을 신축

- 자동차 부품업체의 충남 서북부지역 투자는 인근에 현대자동차(인주), 기아자동차(서산), GM대우자동차(군산) 등 3대 자동차 회사의 영향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노력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펼치며 투자

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도 주요한 입지결정요인 중의 하나

- 경기도는 일본의 스미토모화학을 평택에 유치하면서 민간기업과 경기도 땅을 맞바꿔 유치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

□ 우수 인재의 확보

- 다국적 첨단기술 기업일수록 고급인력이 많고 전반적인 기업 인프라가 가장 뛰어난 곳을 선호

-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과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등장

Ⅴ. 종합 및 정책대안

1. 기본 방향

□ 입지정책에서 비용 최소화와 가치 극대화 요인을 동시에 충족

- 수도권에서는 비용 절감, 비수도권에서는 가치 증진을 위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정책의 관심 영역

- 현재의 상황은 수도권은 가치 극대화의 이점이 지방의 비용 최소화의 이점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지속

- 그러므로 수도권의 비용절감 보다는 지방의 가치증진을 위한 입지요인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 주변지역의 핵심 경제권역의 위상을 감안하여 글로벌 관점에서의 균형발전을 추진

- 한국의 지역경제 발전축을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결된 서울·인천·대전권과 동남해안과 내륙이 연계된 동남권 등 2극 체제로 광역화

- 서남권과 강원권은 제조업이나 이와 연계된 IT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발전 벨트를 형성

□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2. 정책제언

□ 개발방식의 다양화로 입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용지 공급, 기업도시의 개발 등에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
  · 산업용지의 수급 불균형 완화, 공공부문의 자금 부담 경감, 복합적 용도의 토지 공급 등을 촉진하는 기업도시 개발을 독려

- 임대용 공장부지 공급 확대를 통하여 산업 공동화 방지 및 U-턴을 유도

□ 핵심적이고 소프트한 입지요인 확충에 주력

- 입지 경쟁력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의 평균적인 수준 향상을 꾀하는 것은 비효율적
  · 핵심적 규제 완화, 대규모 부지의 확보, 종업원을 위한 양호한 배후도시 건설, R&D 시설과의 접근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양호한 인력 풀의 확보 등이 핵심요인

- SOC 등 물리적 조건을 확충하는데서 탈피, 입지 요인의 소프트한 측면에 대한 관심 증대
  · 해당 지역의 노사관계의 분위기, 기업에 대한 정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애로 청취, 현장에서 해결 등)

□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체계 구축

- 대학을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혁신주체로 육성하고 공공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산(産)·학(學) 연계 활동 강화

- 지역을 대표하는 챔피온 클러스터 창출에 역량 집중
  ·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네트워크가 밀접한 기업 간의 산(産)·산(産) 연계 모델인 '기업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

□ 대도시 주변지역에 제조업 입지공간을 확보

- 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대도시 외곽 또는 주변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 인력, 문화 등 대도시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면서 제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이 필요

□ 벤처기업의 육성은 연구소 입지와 연계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은 연구기능과의 밀접한 연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등 연구기관 집적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실시

□ 외자유치와 국내 매출액 상위기업과의 입지적 연계를 고려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정책은 국내 상위기업과의 입지적·기능적 연계가 필요

- 외국인 기업 전용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등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는 국내 대기업 집적지역에 인접하여 제공 또는 유도

-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지역 주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입지를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매출액 1,000대 기업 입지 분포와의 상관계수

구 분		상관계수(Corr.)
외국인 투자기업 수	상위 1,000대 기업 수	0.9382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 수	상위 1,000대 기업 종업원 수	0.9277

□ 급격히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확대

- 이러한 지역들은 재정자립도 역시 매우 낮기 때문에 자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없음

-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대체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 추진

□ 중앙정부는 초광역적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에 주력

- 특정 지역의 기업유치나 입지 경쟁력 제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지활용과 관련된 정책 등 해당 지역에 한정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Ⅰ.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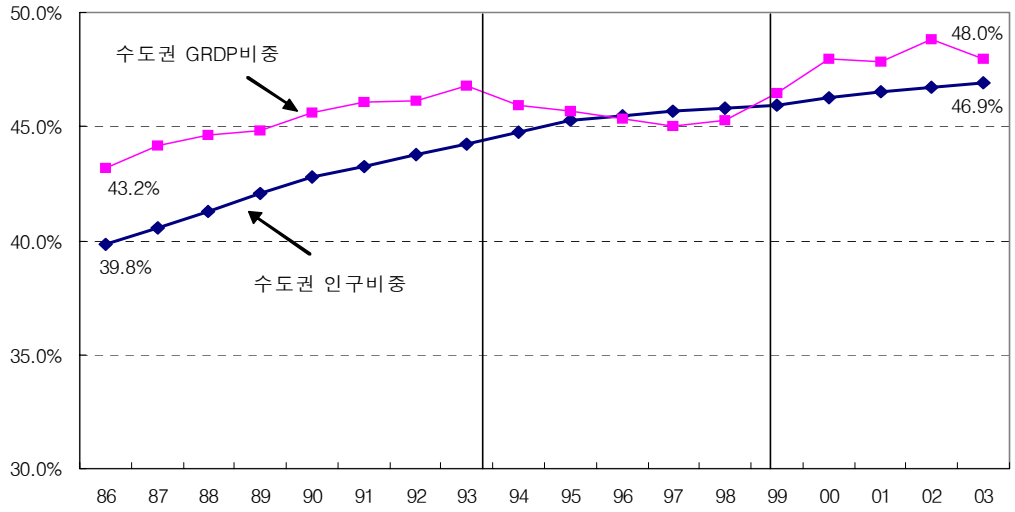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지속

□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

-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90년대 중반 한때 낮아졌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다시 상승(2003년 48.0%)
  -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산업 및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침체

-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1987년 40%를 돌파한 이후 계속 높아져 2002년에는 46.7%를 차지
  -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일본 동경권(32.3%), 프랑스 파리권(18.2%)에 비해서 매우 높은 실정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총생산 및 인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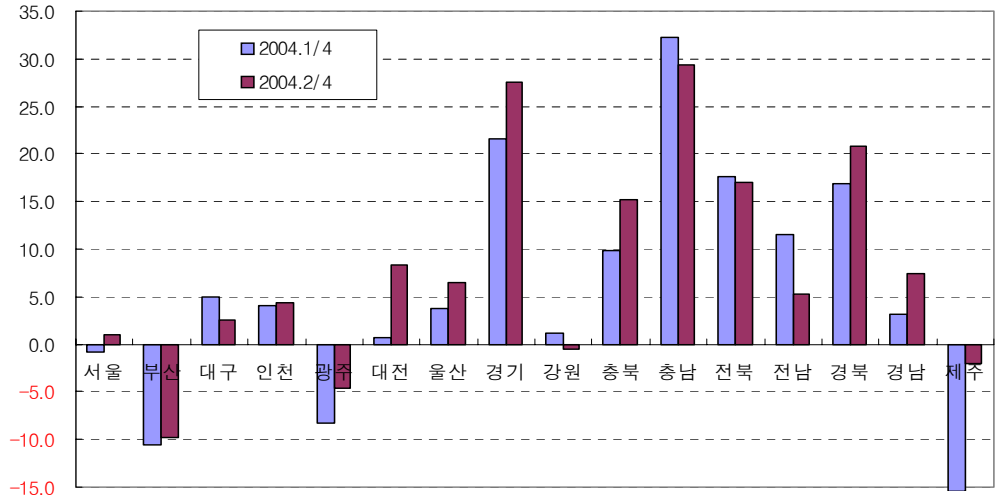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지역별 산업생산의 양극화 지속

- 경기와 충남지역의 2004년 상반기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했으며 경북, 전북, 충북 등의 지역에서 비교적 증가율이 높음

- 반면에 부산, 광주, 강원, 제주 등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대구, 인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산업생산 증가율이 정체

지역별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 통계청

□ 지방의 산업 공동화 심화로 소득감소 및 실업을 야기

- 섬유 및 신발산업, 가전, 일반 전자부품, 공작기계 분야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
  · 부산, 대구 등 이들 산업이 집적되어 있던 지역의 산업기반이 침체

□ 지역주민 소득과 관련이 높은 유통 및 건설 산업의 침체도 지속

-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 진출로 기존의 재래상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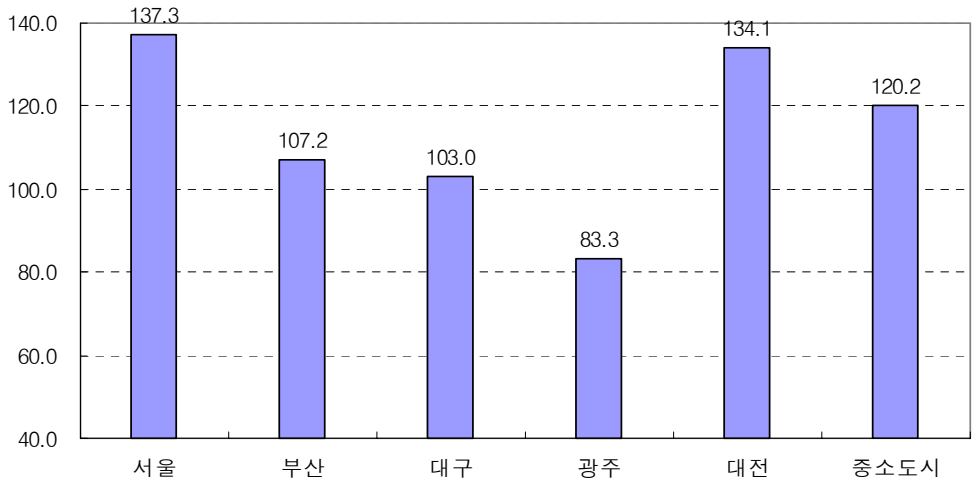
□ 지방의 산업 클러스터 기반 취약

-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지역밀착형 대기업이 적으며 그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나 대-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동반발전이 불투명

□ 지역 불균형이 부동산 가격상승, 소득격차 등 사회문제의 요인이 됨

- 서울의 2003년 주택가격지수는 137.3을 기록하였으나 대구는 103.0, 광주는 83.3에 불과 (1995년=100)

주요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200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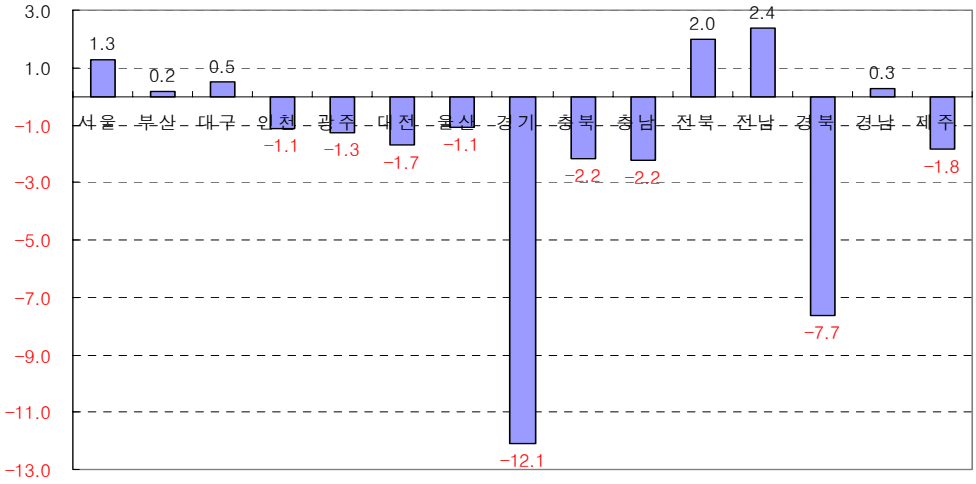
주 : 1995 = 100 기준
자료 : 주택은행

□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도 심각한 수준

- 대구, 부산, 전남북 등의 고통지수가 높으며 경기, 충남북, 경북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고통지수가 낮은 지역은 정보통신, 전자기기 등의 활성화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음

지역별 고통지수



주: 지역별 고통지수 = 소비자물가 상승률(03) + 실업률(03) -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98-02)

자료 : 통계청

정부는 강도 높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중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행재정 권한의 지방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2008년까지 국비 44.5조원, 지방비 14.4조원, 민자 7.6조원 등 총 66.6조원을 투입할 예정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재원 소요(04~08)

	총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665,732 (100.0)	108,562	123,164	133,708	143,940	156,358
국 비	445,349 (66.9)	74,155	81,773	89,111	96,314	103,996
지방비	144,273 (21.7)	26,400	27,350	28,276	29,995	32,252
민 자	76,110 (11.4)	8,007	14,041	16,321	17,631	20,110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사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사업 등이 동시다발적

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앙부처에서는 혁신역량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혁신 클러스터육성을 핵심 과제로 선정

-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사업) 대상으로 전국 111개 사업단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총 1.4조원을 투자

-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
  ·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산업단지를 시범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투자
  · 대덕연구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하여 해외 유명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기술 상업화 체계를 구축

7개 시범 클러스터의 발전비전 (2005년 착수)

구분	발전 비전	혁신 과제
창원	첨단기계 클러스터	차세대 핵심 기계기술 개발
구미	디지털 전자산업 선도	디지털 전자정보 기술집적지 조성
울산	자동차 부품 글로벌 공급기지	오토밸리(모듈화·전문화·대형화)
반월시화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글로벌 소규모 클러스터 조성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	광기술원 중심의 산학연계 활성화
원주	첨단의료기기 산업거점	의료기기 선도기업 유치
군산	자동차·기계부품 클러스터	핵심 부품기업 유치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 광역 시·도별로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연(地緣)산업 육성이 핵심 이슈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식기반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시·도별로 각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식품, 관광, 문화, 농림어업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지역 연고산업을 선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조성과 연계

□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 정책들은 '신활력 지역' 육성 정책으로 통합

-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정도가 하순위인 30%에 해당하는 70개 신활력 지자체가 선정되었음(2004. 8.)

-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낙후 정도에 따라 지자체별 20~30억원 정도씩 매년 2,000억원을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임

□ 반면에 민간부분의 지역개발 참여나 니즈 반영은 미흡

-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음

- 경제특구 내 국내 기업 역차별, 노사관련 특례 규정의 축소 등이 이슈

- 인천·부산·광양 등 3개 지역에 동시에 조성하는 것에 대한 역량 분산 우려가 제기

□ 투자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 중이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않음

- 기업도시의 입지선정과 개발방법 관련, 공공과 민간부문의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 기업도시 건설 후보지에서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인 수도권과 충청권을 배제되고 있으며, 기업도시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사업시작 이전에 특혜 논란이 제기되어 개발 전망이 불투명

지방의 입지 경쟁력 강화가 시급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

- 균형발전의 수단이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상충되는 점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

□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입지 경쟁력 강화가 절실

- 각 지역의 입지적 장점과 비교우위를 활용하되, 동북아의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의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격차를 인정하고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구사

□ 지방의 입지 경쟁력을 강화시켜 균형발전의 동인을 '밀어내기(push)' 방식에서 '끌어오기(pull)' 방식으로 전환

- 수도권 입지규제를 통한 기업의 지방분산 전략은 효과도 적고 부작용도 많음

- 글로벌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의 입지 경쟁력을 높여서 기업이나 산업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산업활동의 지역별 분포와 기업투자 사례조사를 통하여 지방의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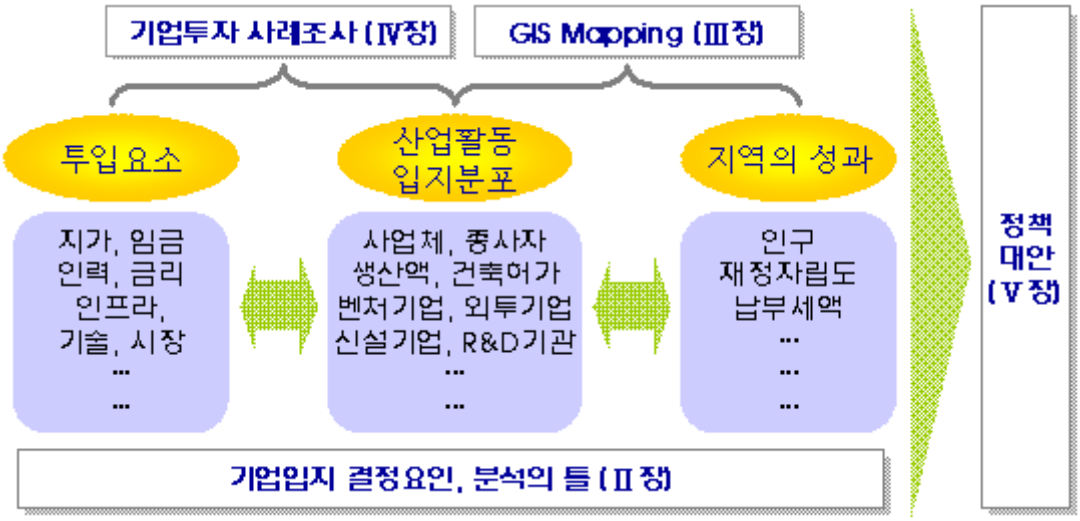
- 기업의 입지 요인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

- 산업활동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추이를 GIS Map을 통하여 파악

- 최근의 지역별 주요 투자사례 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소들을 도출

- 마지막으로 지역분포 추이, 사례연구 등을 종합하여 입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

입지 경쟁력 정책과제 연구 프로세스



Ⅱ. 기업입지요인 분석의 틀

1. 기업입지의 결정요인

□ 기업이나 산업 활동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물리적 조건과 생산요소로 구분[1)]

- 물리적 조건으로는 도로, 항만, 공항,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 인공적인 시설들이 중시

- 생산요소 조건으로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등 고전적 요인 이외에 시장(수요), 정부정책, 삶의 질 등 보다 광범위한 항목들이 포함됨

□ 고전적 산업입지 이론에서는 물리적 조건과 생산요소 조건을 감안, 비용과 이윤 등 비교적 단순한 관점에서 산업의 입지 현상을 설명

1) 소진광, "산업입지이론", 대학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지역경제론』, 서울 : 보성각, 1999.

- 기본적으로 비용 최소화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산업의 입지선택이 논의의 핵심이었음

- 이러한 관점은 비경제적 동기로 인한 경제활동과 미시적인 기업입지 활동의 결과를 설명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산업입지 활동의 결과를 기업가의 행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부각 (정보의 불완전성, 기업가 개인의 선호, 기업의 경영전략 등)

□ 산업의 주력이 전통 제조업에서 디지털, 신산업 분야로 이동하면서 산업입지요인도 변화

- IT, 바이오, 문화 컨텐츠 산업 등 신산업 분야는 과거 전통 제조업에 비하여 지식과 정보,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

- 기업도 이러한 혁신의 발생과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을 더욱 중시하게 됨

□ 신산업의 경우 가치연쇄(value-chain)상의 각 단계별 기능간 긴밀한 연계가 강조되면서 공간적 인접성이 중시됨

- 클러스터를 중시하는 접근법은 특정지역의 혁신체계 (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와 결합되면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특정 사업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 국가나 지방, 주, 혹은 광역시 등을 망라하여 클러스터가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나 산업보다 클러스터가 주도적인 경제현상으로 대두된 것은 경쟁분석에서 클러스터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과 경쟁우위의 확보에서 입지의 비중 또한 크기 때문이다"*
>
> - M. Porter, 1998, On Competition -

□ 신산업 분야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문기술인력의 풍부한 풀(pool) 형성, 둘째, 연구개발시설에의 접근성, 셋째,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

-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산업의 태동과 육성에는 보다 주의 깊은 입지선정이 필요

□ 실제로 기업의 입지 결정시 인프라, 생산요소, 기업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Hayter(1998)는 교통, 원재료, 시장, 노동조건, 외부경제,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자본, 토지·건물, 환경, 정부정책을 포함하여 11가지 요소를 일반적인 기업입지 선택요인으로 제시

기업의 입지 선택 요인

입지요인	구체적 양상	추상적 양상
교통	화물 수송료	신뢰도, 빈도, 손상정도, 활용도
원재료	생산비용, 교통비용	안전성, 질
시장	교통비용, 서비스비용	개인적 접촉, 소비자의 취향, 경쟁
노동조건	임금, 임금외의 편익, 고용비용	태도, 노동조합, 기술, 형태, 이동주기, 활용도
외부경제	-	외부효과(긍정적, 부정적), 노동 숙련도, 정보공유, 공공서비스, 명성
에너지	비용	신뢰도, 다양성
사회기반시설	자본, 세금	질, 다양성
자본(고정, 재무)	건설비용, 임대비용, 리스비용	활용도, 투자되는 시기
토지/건물	비용	크기, 모양, 접근성, 서비스, 돈이 들어가는 시기
환경(쾌적성, 정책)	비용, 세금	지역주민의 태도, 노동자들의 선호도
정부정책	보조금, 세금, 벌금	태도, 안정성, 기업여건 등

자료 : Hayter Roger(1998)

□ 이러한 일반적인 기업 입지요인은 각각의 비중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특성이나 투자사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됨

- 노동조건이나 환경, 정부 정책 등 외부적 요인들이 핵심 입지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입지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입지 요인의 평균 수준뿐만 아니라 어떠한 요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는지도 매우 중요

□ 기업이 입지를 탐색함에 있어서 공간적 규모나 범위에 따른 고려 요인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지정책도 이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 광역 단위의 입지 결정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노동시장의 특성 등 거시적인 요인이 중시

- 지역 단위로 들어가면 교통 및 통신 등의 인프라, 노동시장 여건, 교육 및 문화적 환경, 전후방 연관 산업에의 접근성 등 핵심적 요인이 중시

- 장소나 건물 등 가장 세부적인 입지의 결정은 투지 및 건물의 개별적 속성이 중시

공간 규모에 따른 입지결정 영향요인

공간규모	중요하게 고려되는 영향 요인
광역(Region)	정부의 지역정책,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노동력 연계, 시장
지역(Area, Town)	교통 및 통신, 모기업과의 연관성, 노동력 수급, 비용과 직원 교육, 원자재와 부품 공급자, 서비스에의 접근성, 지역과 중앙정부의 서비스, 주변환경 쾌적성
장소(Site)	도시내 입지, 물리적 속성, 임대기간, 빌딩의 활용도, 서비스와 기반시설에의 접근성, 가격
건물(Building)	구조, 인테리어, 난방 및 조명, 사무집기들, 부수적인 공간, 임대관련조건

자료 : Hayter Roger(1998)

□ 산업입지 요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각각의 고려요인도 차이가 있음

- 특히 신산업 분야의 입지요인은 전통적 입지이론에서 중시하는 요인 이

외에 연구개발, 삶의 질, 노동조건 등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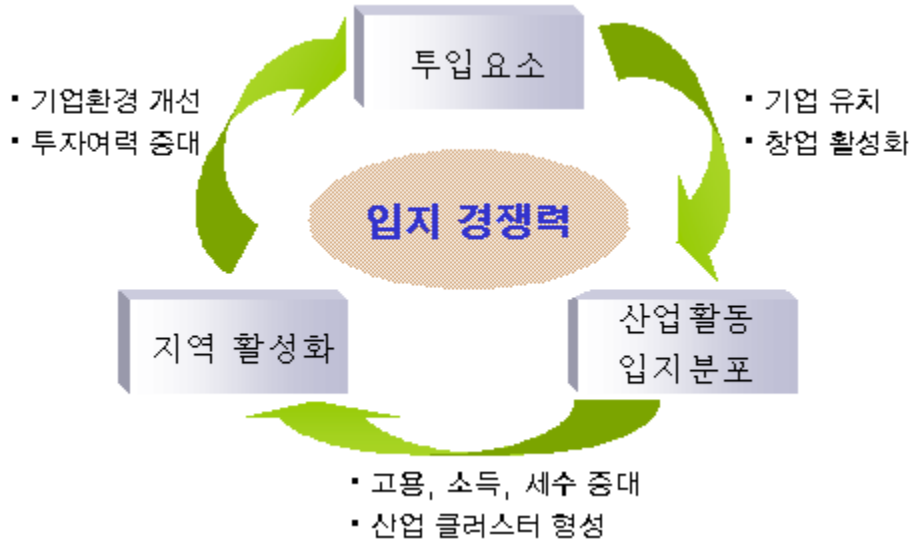
- 다만 이러한 각각의 입지요인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소수의 핵심 요인에 의하여 기업입지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 여기서는 국내 산업 활동의 입지 분포와 그로 인한 지역 활성화의 성과를 지역별 기업 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중점적으로 분석

- 통계적 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입지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 사례조사를 활용

2. 분석의 틀 설정

입지 경쟁력 분석의 틀



□ 지가, 임금, 인프라, 기술 등 투입요소의 차이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여기에 개별 기업이나 기업가의 행태적 요소(선호, 경영전략 등)와 정부의 정책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행태적 요소는 고전적인 산업입지 이론에서는 설명이 어려운 매우 개별적(individual)이고 특수한 것으로서 사례연구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
  · 여기에는 업종의 특성이 반영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예, 노사분규, 사회공헌, 연고지 등)들이 해당

- 정책적 요소의 경우는 정부의 입지정책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입지규제,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시책, 용도지역 지구제 등 각종 토지이용 관련 규제나 지원제도가 여기에 해당

□ 투입요소와 행태적, 정책적 요소가 결합되어 기업, 산업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

- 다만, 투입요소별 중요도는 업종별·성장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따른 산업의 공간적 분업 현상은 입지 요인을 분석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 신산업과 전통제조업의 입지요인의 차이, 기업의 성장단계별 공간적 분포의 분업화 현상의 차이 등

□ 기업의 입지 분포는 사업체의 입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과 기타 업종이나 성장단계별 특별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파악

-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의 지역별 분포가 해당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다 구체적인 성격의 입지분포를 파악

□ 핵심 지표의 경우 특정 시점간의 입지분포 패턴을 GIS Map을 통해서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

-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상위 지역과 하위지역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

- GIS Map의 경우 기업이나 산업 활동의 공간적 분포(level, stock)나 변화(flow) 패턴을 한 눈에 파악하는데 용이

□ 기업, 산업의 입지로 인한 지역활성화 성과는 지역의 고용이나 소득창출, 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가장 현실적이고 간단한 성과지표는 해당 지역의 소득이지만 시·군·구별로는 발표되는 소득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대리변수를 사용[2)]

- 여기서는 지역별 인구 증감률, 인당 납부세액,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

□ 기업의 입지분포와 성과지표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어떠한 요인이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를 도출

- 통계적 상관성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하여 보완

2) 지역내 총생산(GRDP)은 광역 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며 GRDP 그 자체도 생산 측면의 부가가치를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분배 측면에서의 지역의 소득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Ⅲ.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 (GIS Map)

1. 기업입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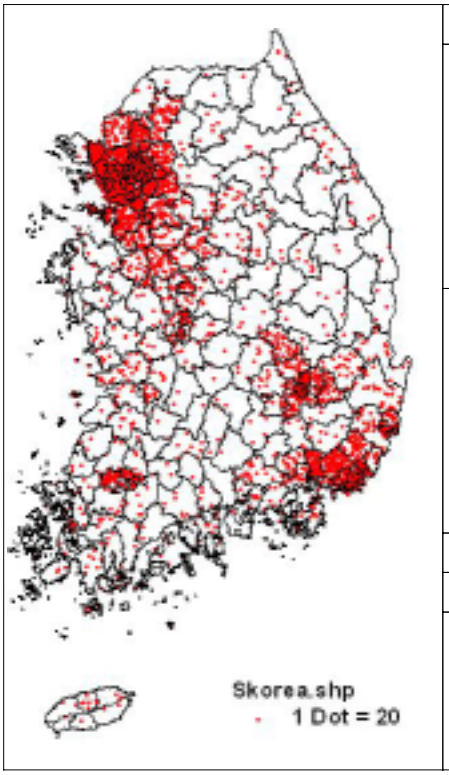
1) 제조업 사업체수 분포

□ 전국 제조업체 111,025개 중에서 수도권에 56.3%인 62,527개가 소재(2002)

- 수도권 65개 시·군·구의 평균 제조업체수는 962개로서 비수도권(287개)의 3배 이상임

-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도 북부로 확산, 대전까지 연결되는 제조업 분포의 “서울-대전축”이 형성되고 있음

제조업 사업체수의 입지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인천 남동구(3,651) ②경기 부천시(3,621) ③경기 시흥시(3,109) ④서울 중구(3,070) ⑤인천 서구(2,958)	①부산 사상구(3,053) ②경남 김해시(2,372) ③대구 달서구(2,212) ④대구 북구(1,789) ⑤경남 창원시(1,618)
하위 5개	①인천 강화군(61) ②경기 양평군(54) ③인천 연수구(51) ④경기 과천시(12) ⑤인천 옹진군(4)	①경북 청송군(17) ②강원 양구군(16) ③강원 화천군(12) ④충남 계룡시(9) ⑤경북 영양군(6)
합계	62,527개(56.3%)	48,498개(43.7%)
평균	962개	287개
비고		

주 : 2002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 단위는 개수, 점 하나는 사업체 20개를 표시

□ 수도권(169개 시·군·구)에서는 서부지역인 인천 남동구와 서구, 경기도 부천시와 시흥시, 서울 중구 등 3개 시군구에 가장 많이 집적

- 반면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양평군과 과천시, 인천 연수구 등 군 지역과 주거지 밀집지역에는 사업체 밀도가 아주 낮음

□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 및 김해시, 대구 달서구 및 북구 등 동남권 해안과 대구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밀집

- 그 외 광주, 대전, 천안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사업체 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 대표적으로 경북 북부지방 및 강원도 전지역, 전북 및 전남지역이 과소

2)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 1990~2002년 사이에 제조업 사업체수는 수도권 남부와 서울-대전축, 울산과 대구 주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증가

- 수도권의 경기도 시흥시·화성시·안성시, 인천의 남동구·서구, 비수도권의 부산 강서구, 경남 김해시, 충북 음성군·진천군, 경북 칠곡군 등은 2~5배 이상 증가

□ 비수도권의 경부 북부와 강원 영서, 서남권 동부지역과 도서지역 등에서는 사업체수가 오히려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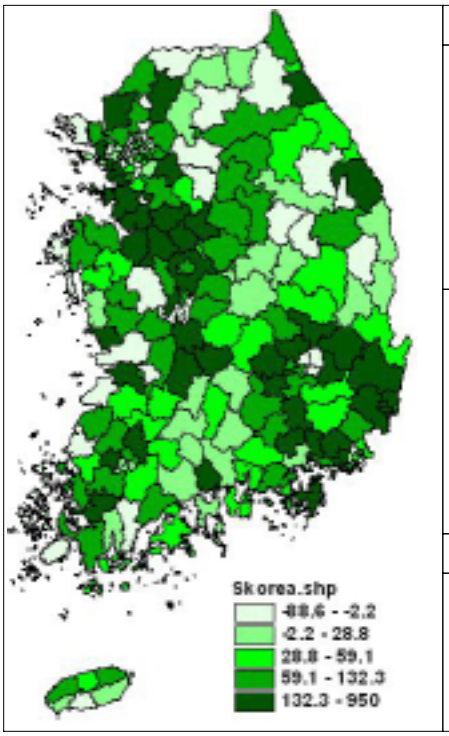
- 수도권의 경기 의정부·구리시, 서울 영등포, 비수도권의 전남 해안지역, 경북 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체수가 감소

□ 동기간 동안의 수도권 시·군·구의 평균 사업체수 증가율은 55.5%로서 비수도권의 증가율 60.5%보다 낮음[3)]

3) 그러나 여기에는 서비스업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체의 증가율과는 다름

- 이는 수도권 입지규제(공장총량제 등)의 영향과 표준화된 제품생산 설비의 자연적인 지방 확산에 기인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률 (1990~2002)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경기 시흥시(560.1) ②인천 남동구(410.6) ③경기 화성시(295.2) ④인천 서구(237.7) ⑤경기 안성시(221.2)	①부산 강서구(454.0) ②경남 김해시(363.3) ③충북 음성군(355.6) ④경북 칠곡군(322.1) ⑤충북 진천군(319.5)
하위 5개	①경기 과천시(-25.0) ②경기 의정부시(-31.6) ③서울 영등포구(-56.3) ④경기 구리시(-68.2) ⑤인천 옹진군(-88.6)	①충남 태안군(-51.8) ②전남 진도군(-51.9) ③충남 계룡시(-59.1) ④전남 영광군(-60.6) ⑤전남 신안군(-88.5)
평균	55.5%	60.5%
비고		

주1 : 1990~2002년 사이의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률, 단위는 %
주2 : 경북 울릉군이 증가율이 매우 높지만 사업체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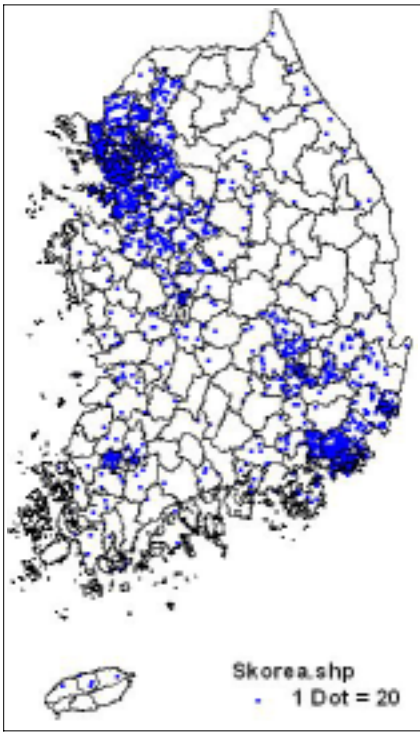
□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는 총 22,321개, 시·군·구별로는 평균 343개 업체가 증가

-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총 18,007개, 시·군·구별 평균 107개의 증가에 그침

- 경기 시흥·화성, 인천 남동구·서구 등에서는 2,000개 이상의 사업체가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경남 김해·창원, 부산 강서, 충남 천안 등에서도 1,000여개 내외의 사업체가 증가

- 반면 서울 영등포는 1,043개, 전남 신안군은 423개 업체가 감소하였고 대전 동구, 대구 북구, 전남 영광·진도군에서도 100여개 내외가 감소

제조업 사업체수 증감 규모 (1990~2002)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인천 남동구(2,936) ②경기 시흥시(2,638) ③경기 화성시(2,155) ④인천 서구(2,082) ⑤경기 안산시(1,551)	①경남 김해시(1,860) ②경남 창원시(1,018) ③대구 달서구(1,005) ④부산 강서구(917) ⑤충남 천안시(734)
하위 5개	①서울 노원구(-96) ②서울 동대문구(-107) ③경기 의정부시(-112) ④경기 구리시(-318) ⑤서울 영등포(-1,043)	①전남 진도군(-67) ②전남 영광군(-83) ③대구 북구(-89) ④대전 동구(-156) ⑤전남 신안군(-423)
합계	22,321개	18,007개
평균	343개	107개
비고		

주 : 1990~2002년 사이의 제조업 사업체수 증가분, 단위는 개, 점 하나는 사업체 20개

3) 제조업 종사자 분포

□ 인구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사업체수 분포 패턴과 유사하나 수도권 남부와 인접한 충청권 북부, 동남권의 대도시 주변지역이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시·군·구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평균 6.3%로서 비수도권의 5.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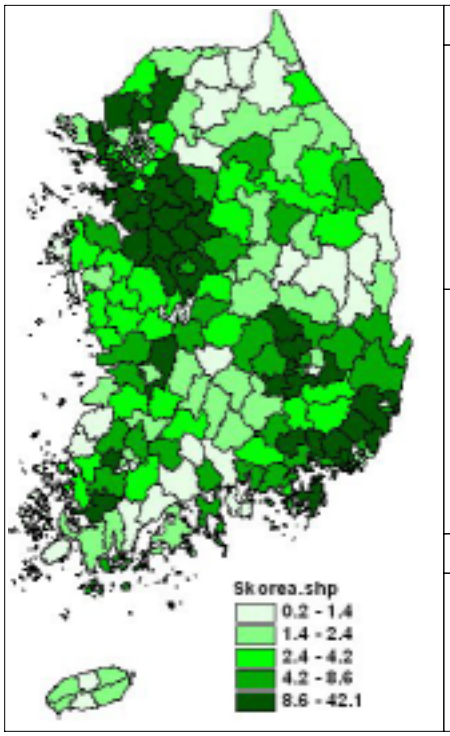
□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32.7%로서 가장 높으며 서울 중구, 인천 남동구, 경기 양주군·시흥시가 15% 이상을 기록

-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강서구(42.1%)를 비롯하여 울산 북구·동구, 충북 음성군·진천군 등이 20% 이상으로 매우 높음

□ 반면에 사업체 입지가 희박한 수도권의 경기 양평군·과천시, 서울 일부, 인천 연수구 등은 1% 미만

- 비수도권에서는 169개 시·군·구중에서 61개 지역이 2% 미만, 22개 지역이 1% 이하를 기록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경기 화성시(32.7) ②서울 중구(20.7) ③경기 양주군(19.4) ④인천 남동구(18.7) ⑤경기 시흥시(16.4)	①부산 강서구(42.1) ②울산 북구(30.8) ③충북 진천군(24.1) ④충북 음성군(21.1) ⑤울산 동구(20.9)
하위 5개	①서울 은평구(0.7) ②서울 노원구(0.6) ③경기 과천시(0.2) ④인천 옹진군(0.2) ⑤인천 연수구(0.2)	①대전 서구(0.5) ②광주 남구(0.4) ③울산 중구(0.3) ④대구 남구(0.3) ⑤제주 서귀포시(0.2)
평균	6.3%	5.2%
비고		

주 : 2002년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 단위는 %(제조업 종사자수/인구)

4) 제조업 고용 창출

□ 1990~2002년 사이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비수도권(-0.05%p) 보다는 수도권(-2.89%p)에서 감소율이 더욱 높음

- 수도권 동남부와 북부지역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주변과 김해, 구미 등 전통주력산업 집적지역도 감소율이 뚜렷

□ 인접한 지역 간에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증감률이 큰 격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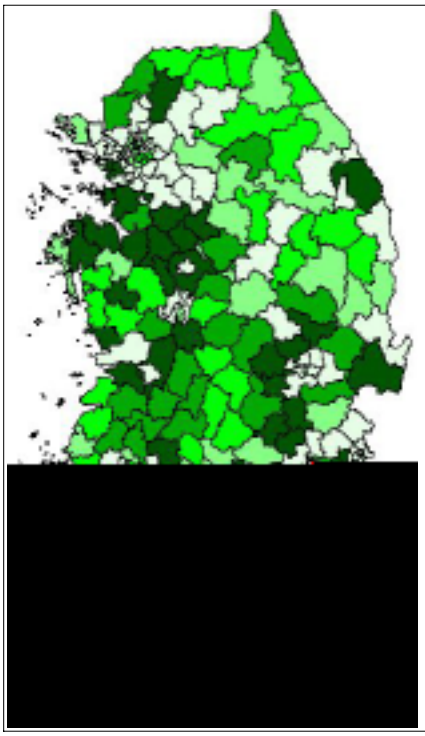
- 부산의 사상구는 -33.9%p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부산 강서구는 36.7%p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임

· 이는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사상구의 섬유, 신발산업의 급속한 침체, 강서구의 자동차산업, 부품소재산업의 입지 등)를 극명하게 반영

- 대구 북구는 -13.9%p로 감소한 반면, 인접한 경북 칠곡군은 11.1%p 증가

-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4]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특히 대도시에 소재한 제조업체가 주변이나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대도시 제조업 이탈과정을 보여줌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변화 (1990~2002)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인천 남동구(11.6) ②경기 시흥시(7.3) ③서울 중구(6.0) ④경기 화성시(5.8) ⑤경기 안성시(3.7)	①부산 강서구(36.7) ②충북 진천군(16.1) ③전남 영암군(13.1) ④충북 음성군(12.5) ⑤경북 칠곡군(11.1)
하위 5개	①경기 김포시(-12.6) ②경기 오산시(-14.6) ③경기 군포시(-15.0) ④경기 용인시(-16.1) ⑤경기 안산시(-16.2)	①강원 정선군(-9.5) ②경북 구미시(-10.7) ③대구 북구(-13.9) ④경남 양산시(-25.0) ⑤부산 사상구(-39.9)
평균	-2.89%p	-0.05%p
비고		

주1 : 1990~2002년 사이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 변화, 단위는 %p(비율 변화)
주2 : 울산광역시의 경우 90년에 별도의 자치구가 없었으므로 증감 순위에서 제외

□ 전체적으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 지방의 광역시 및 주변지역, 경북 북부와 강원도 지역의 증가율이 낮음

- 경기도의 김포, 오산, 군포, 용인, 안산시 등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10%p 이상 감소

4) 제조업 공동화, 서비스업의 성장, 공장부지에 대한 대규모 택지개발로 주거인구 증가 등

- 또한 구미, 양산, 마산, 창원 등 전통 제조업 중심지의 경우에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임

- 이는 수도권의 제조업 이탈과 서비스화 진전, 전통주력산업 집적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제조업(종사자 기준) 입지가 도시 내 또는 인접지역에서 도시화가 덜된 외곽지역으로 더욱 확산, 이전되는 패턴을 확인

- 이는 도시 내 토지이용에 있어서 제조업(공업) 기능과 서비스업과 주거, 상업 기능과의 입지 경쟁에서 제조업이 밀려난 결과

- 더 낮은 지가, 노동비용, 관리유지 비용이 소요되는 지역으로의 제조업의 공간적 이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5) 제조업 인당 생산액

□ 1인당 제조업 생산액은 해당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 정도와 장치산업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 비수도권 시·군·구의 평균 1인당 생산액이 198.0 백만원으로서 수도권의 166.7 백만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장치산업이 집적된 결과

□ 수도권 내에서는 인천 동구·남구, 경기 광명시·수원시·용인시 등 서남부 지역이 인당 300~500 백만원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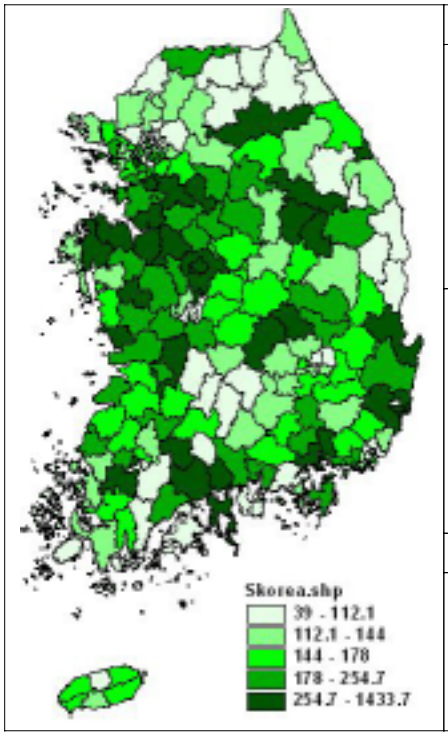
- 경기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등이 상위 그룹에 포함

□ 반면 비수도권 에서는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장치산업이 집적된 해안지역과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집적된 지역에서 높음

- 경북 포항시·구미시, 울산 울주군·남구, 경남 창원, 전남 여수시·광양시, 충남 서산시 등이 여기에 해당

- 여수시, 서산시, 울산 남구 등은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생산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수도권의 상위 그룹의 2배 정도로 높음

시·군·구별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생산액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인천 동구(517.5) ②인천 중구(442.5) ③경기 광명시(392) ④경기 수원시(370.9) ⑤경기 용인시(362.4)	①전남 여수시(1433.7) ②충남 서산시(1418.1) ③울산 남구(1130.7) ④울산 울주군(628.9) ⑤전남 광양시(585.3)
하위 5개	①서울 은평구(66.4) ②인천 연수구(59.0) ③서울 강북구(58.2) ④서울 성북구(57.4) ⑤서울 중랑구(53.5)	①전남 완도군(51.6) ②광주 동구(47.2) ③강원 태백시(42.1) ④부산 북구(40.9) ⑤대구 남구(39.0)
평균	166.7백만원/인	198.0백만원/인
비고		

주 : 2002년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생산액, 단위는 백만원/인

6) 인당 생산액 증감

□ 고부가가치가 증가하는 지역도 인당 생산액이 높은 지역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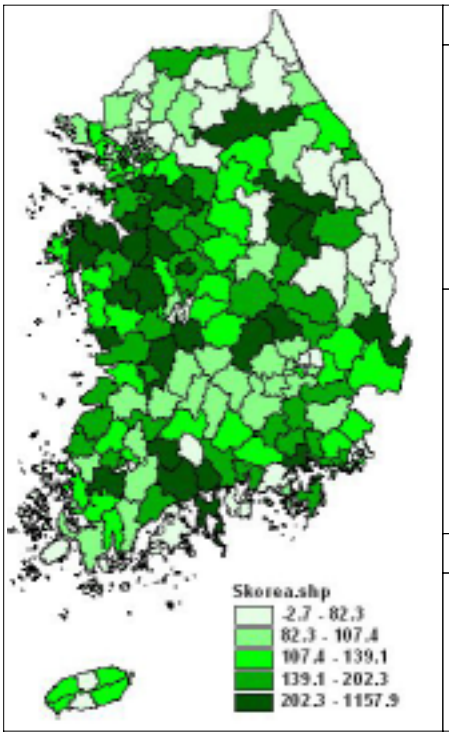
- 1990~200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치를 시현한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인천 동구·중구, 경기도 용인시·수원시·광명시 등 수도권 남서부 지역임

-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서산시와 전남 여수시가 인당 10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남 광양시, 경북 구미시·김천시·포항시, 충남 천안시·아산시·공주시 등도 큰 폭으로 증가

□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폭이 143.3백만원/인으로서 수도권의 119.0백만원/인보다 높게 나타남

- 동기간 동안 장치산업, 대규모 조립산업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의 신규투자에 기인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생산액 변화 (1990~2002)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인천 동구(401.4) ②인천 중구(325.5) ③경기 용인시(291.2) ④경기 수원시(281.5) ⑤경기 광명시(269.4)	①충남 서산시(1157.9) ②전남 여수시(1132.6) ③전남 광양시(434.1) ④경북 구미시(424.8) ⑤전남 순천시(420)
하위 5개	①서울 은평구(32.6) ②서울 도봉구(30.7) ③서울 강북구(30.1) ④서울 성북구(29.6) ⑤서울 중랑구(25.2)	①부산 북구(21.5) ②광주 동구(21.4) ③강원 삼척시(17) ④대구 중구(16) ⑤대전 중구(7)
평균	119.0백만원/인	143.3백만원/인
비고		

주1 : 1990~2002년 사이의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생산액 증감, 단위는 백만원/인
주2 : 옹진군과 울릉군은 증감 순위에서는 제외 (규모가 지나치게 적음)

7) 건축허가 면적 (광공업용)

□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은 해당 지역의 신규 투자(산업용)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리 변수

- 시기별로 건축허가 면적의 총 규모와 각 지역별 산업용 신규투자의 패턴 변화를 파악

□ 3개 연도(1990, 1995, 2002년)중에서 1995년에 건축허가 면적이 가장 많으며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95년에 비하여 2002년에는 건축허가 총량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특정 지역의 편중도가 심화

□ 1990년에는 수도권 북서부 지역과 동남권에 건축허가가 집중

- 경기도 양주군·김포시, 인천 남동구, 서울 강서구 등 서울 외곽지역과 북서방향의 경기도 지역에 건축허가가 집중
  · 비수도권이 1,780,183㎡으로서 수도권(335,416㎡)의 5배 정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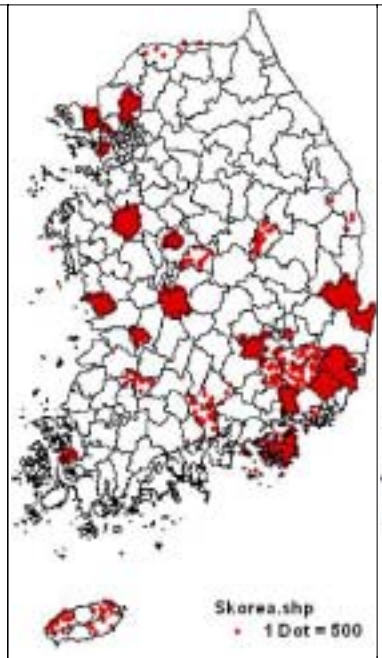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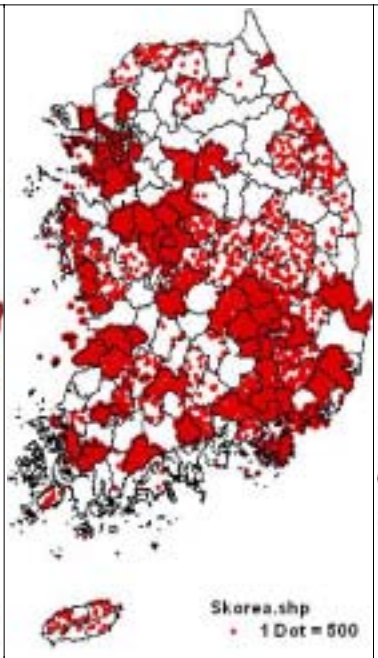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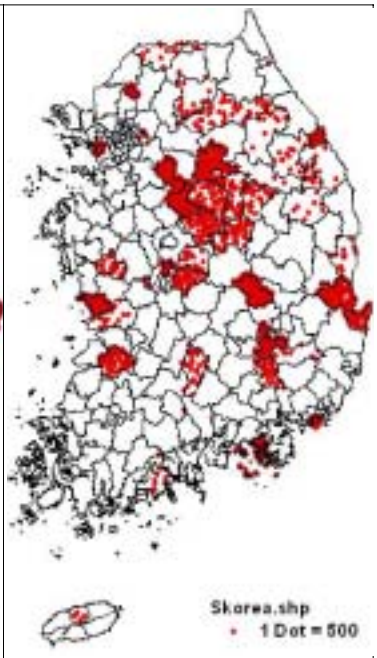
- 동남권에서는 경남 창원시·양산시·거제시, 경북 포항시, 울산시 울주군, 중부권에서는 충남 아산시·금산군, 충북 청원군에 집중

□ 1995년에는 광공업 건축허가 실적이 전국적으로 확산

- 권역별로는 수도권 남부지역, 충청권 북부, 경북 구미·칠곡·포항을 포함하는 대구시 주변지역, 동남권의 창원·마산, 울산 등이 대표적
  · 경기 시흥·안산·화성·김포, 부산 강서, 경북 포함, 충남 아산, 울산 울주군 등에 집중

- 서남권에서도 전남 광양·무안, 광주광역시, 전북의 군산을 포함한 전주권에서도 건축허가가 활발

광공업용 건축허가 면적 추이

						
	1990		1995		2002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경기 양주군 (133,167) ②경기 김포시 (125,247) ③인천 남동구 (73,258) ④서울 도봉구 (2,975) ⑤서울 강서구 (769)	①경남 창원시 (344,807) ②충남 아산시 (219,172) ③충북 청주시 (206,426) ④경북 포항시 (185,126) ⑤울산 울주군 (150,253)	①경기 시흥시 (385,075) ②경기 안산시 (296,644) ③경기 화성시 (285,850) ④경기 김포시 (267,359) ⑤인천 남동구 (229,619)	①부산 강서구 (569,055) ②충남 아산시 (534,262) ③경북 포항시 (444,243) ④전남 광양시 (389,086) ⑤울산 울주군 (337,418)	①인천 남동구 (278,599) ②경기 이천시 (82,602) ③경기 동두천시(30,294) ④경기 하남시 (3,797)	①충북 음성군 (185,046) ②경북 구미시 (175,112) ③경북 포항시 (94,249) ④부산 사하구 (93,938) ⑤대전 대덕구 (82,025)
하위 5개	5개 시군구만 건축허가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없음	하위 138개 시군구는 건축허가 실적 없음	하위 42개 시군구는 건축허가 실적 없음	하위 53개 시군구는 건축허가 실적 없음	상위 4개 시군구만 건축허가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없음	하위 130개 시군구는 건축허가 실적 없음
합계	335,416㎡	1,780,183㎡	1,938,354㎡	7,731,564㎡	395,292㎡	1,242,114㎡
평균	5,160㎡	10,534㎡	29,821㎡	45,749㎡	6,081㎡	7,350㎡

주 : 각 연도별 건축허가 면적 기준, 단위는 ㎡

□ 반면 2002년에는 충청권 북부지역에 건축허가가 집중

- 수도권에서는 인천 남동구, 경기 이천시 등 일부지역에서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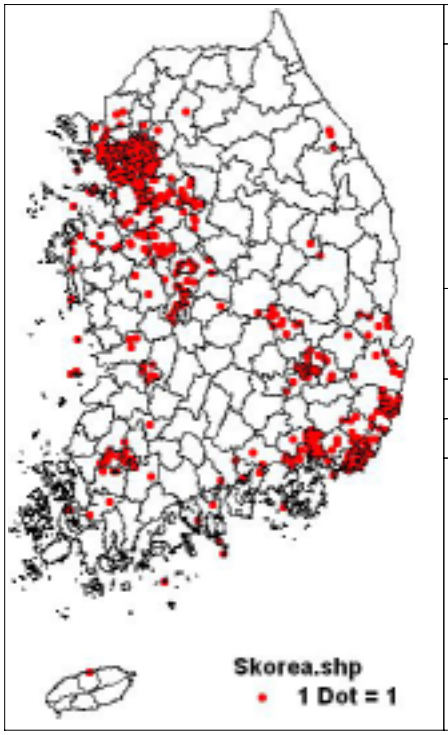
-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음성군·괴산군, 대전 유성구, 강원도 원주시 등 수도권-충청권-강원도 접경지역에 건축허가가 집중
  · 동남권에서는 경북 구미시·포항시, 대구 달성군 등 일부지역에서만 건축허가 실적이 나타남

8) 상위 1,000대 기업 분포

□ 대기업(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기준)의 입지는 지역 내 주력기업(시스템 통합자 SO: System organizer)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

- 해당 지역에서 고용 창출력과 생산 기여도가 높으며 부품, 소재산업 등 연관 산업의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매출액 상위기업의 입지는 중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서울 강남구(142) ②서울 중구(109) ③서울 영등포구(80) ④서울 종로구(57) ⑤서울 서초구(52)	①경남 창원시(24) ②충남 천안시(14) ③경북 구미시(12) ④경북 포항시(10) ⑤경남 마산시(9)
하위 5개	하위 15개 시군구에는 한 개도 없음	하위 92개 시군구에는 한 개도 없음
합계	726개	274개
평균	11.0개	1.63개
비고		

주 : 대한상공회의소, 단위는 개, 2003년 기준

□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72.6%인 726개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시·군·구별로 볼 때, 평균 11.0개에 해당

- 반면 지방에는 274개가 입지하고 있으며 시·군·구별로는 평균 1.63개에 그치고 있음

□ 수도권에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 등 상위 5개 지역에 국가 전체의 약 절반 정도인 440개가 위치

- 그러나 수도권 내에서도 시군구별 대기업의 입지 편중이 매우 심함
  · 서울 강북·도봉·중랑·은평구, 인천 연수구, 경기도 광명시 등 15개 시·군·구에는 하나도 없음

□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시에 24개로 가장 많고 경북 구미시·포항시, 충남 천안시, 경남 마산시 등에 다수 분포

- 비수도권 169개 시·군·구중에서 54%인 92개 지역에는 하나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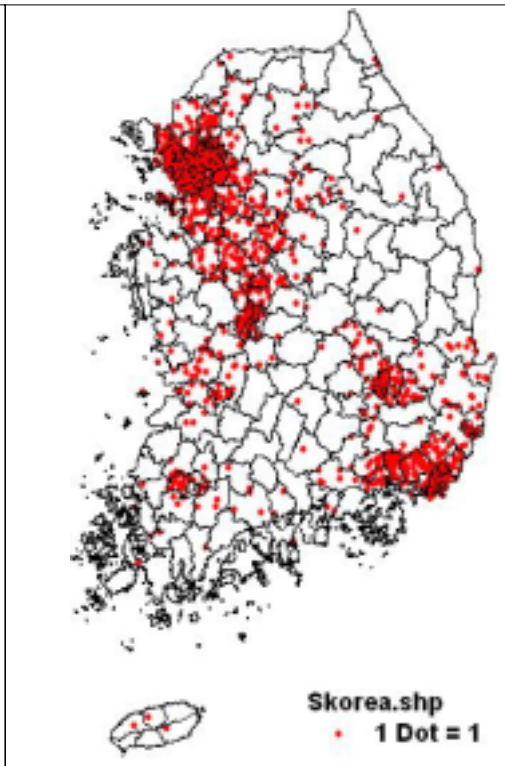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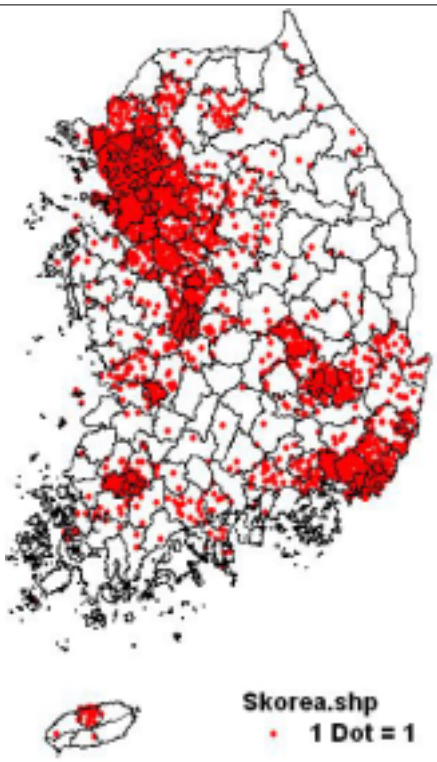
9) 벤처기업 입지 분포

□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기초한 창업기업으로서 첨단 창업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데 용이

- IMF 이후인 99년의 벤처기업 분포 패턴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화되면서 주변지역으로 일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수도권과 대전, 대구, 부산 등에 핵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하며 인접지역으로 확산

- 2004년에는 수도권과 대전이 연결, 벤처기업 입지분포의 서울~대전 축이 형성
  · 창업 벤처기업이 서울~대전축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할 경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보다 확대된 첨단산업 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

벤처기업 입지 분포

				
	1999		2004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서울 강남구(223) ②서울 서초구(204) ③인천 남동구(120) ④서울 영등포구(82) ⑤경기 안산시(66)	①부산 사하구(41) ②대구 달서구(40) ③부산 사상구(40) ④경남 김해시(39) ⑤충남 천안시(39)	①서울 강남구(871) ②서울 서초구(462) ③경기 성남시(343) ④서울 영등포구(245) ⑤서울 구로구(230)	①대전 유성구(243) ②대구 달서구(123) ③경남 창원시(99) ④충남 천안시(87) ⑤경남 김해시(85)
하위 5개	①경기 연천군(1) ②경기 오산시(1) ③경기 의정부시(1) ④인천 연수구(1) ⑤인천 강화군(0)	하위 52개 시군구에는 하나도 없음. 차하위 32개 시군구에는 1개 업체만 있음	①인천 강화군(2) ②경기 동두천시(1) ③경기 가평군(1) ④경기 연천군(0) ⑤인천 옹진군(0)	하위 34개 시군구에는 하나도 없음. 차하위 19개 시군구에는 1개 업체만 있음
합계	1,688개(65.8%)	877개(34.2%)	5,701개(69.5%)	2,501개(30.5%)
평균	25.6개	5.2개	86.4개	14.9개
비고				

주 : 연도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통계, 단위는 개

-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인접한 김해, 창원, 마산이 하나의 벤처기업 권역을 형성

• 대구와 구미지역도 국지적인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의

분포는 미약

□ 1999년의 총 2,565개의 벤처기업 중에서 수도권 점유율이 65.8%였으나 2004에는 69.5%로 소폭 상승

- 수도권 시·군·구에는 평균 86.4개, 비수도권 시·군·구에는 평균 14.9개의 벤처기업이 입지

□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테헤란 밸리인 강남·서초구에 벤처기업이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으며 영등포와 금천구, 구로구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서울의 서남부 지역의 벤처기업 증가현상은 이 지역이 전통산업 중심지에서 첨단산업으로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벤처기업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간적 확산현상이 뚜렷

-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등에는 1개의 벤처기업도 없음

□ 비수도권에서는 대덕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및 대덕구의 벤처기업 집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역시 대전을 중심으로 인근의 충남 천안시, 아산시, 청원군 등으로 확산되어 수도권과 연결된 벤처기업 집적 축을 형성

- 동남권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구미지역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창원, 김해지역에도 벤처기업이 더욱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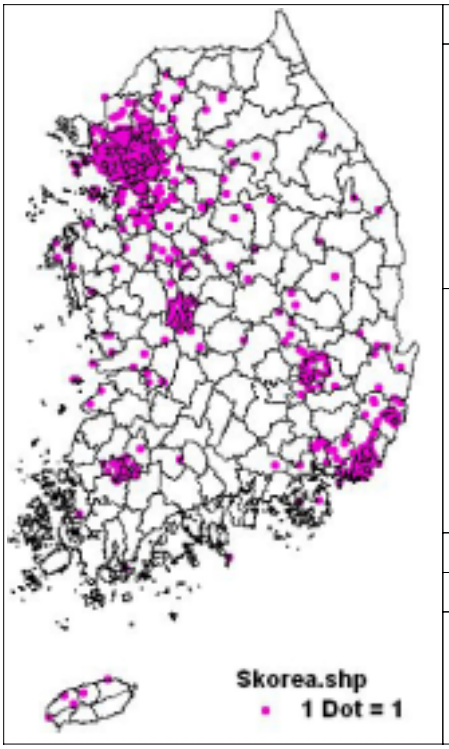
- 그렇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진해시, 강원 동해시, 부산 서구, 전북 장수군, 전남 고흥군, 충남 청양군 등 34개 시·군·구에는 하나도 없음

10) 2004년 신설기업

□ 2004년에 신설된 1,755개[5]의 기업 중 80.1%인 1,405개가 수도권에서 창업

- 수도권 시·군·구의 2004년 신설기업은 평균 21.3개로 비수도권의 2.1개에 비하여 매우 높음

2004년 신설기업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서울 강남구(199) ②서울 서초구(111) ③서울 중구(81) ④서울 송파구(75) ⑤서울 마포구(65)	①부산 사상구(16) ②대구 달서구(15) ③부산 부산진구(14) ④울산 남구(14) ⑤대전 서구(11)
하위 5개	하위 7개 지역은 신설기업 없음	하위 76개 지역은 신설기업 없음
합계	1,405개(80.1%)	350개(19.9%)
평균	21.3개	2.1개
비고		

주1 : 대한상공회의소(2004년 1월 ~ 8월 기준), 단위는 개
주2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넷'에 등록된 기업 중에서 2004년에 신설된 기업을 대상

□ 수도권에서는 역시 서울(강남, 서초, 중구, 송파, 마포구 등)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창업하였으나 경기도 오산시, 양평군 등 하위 7개 지역에는 신설기업이 없음

- 금융, 대학, 연구기관, 모기업 등 대도시의 양호한 기업 환경이 창업을 촉진하는 인큐베이터 가설[6]을 확인

5)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DB인 '코참비즈넷'에 등록된 기업을 기준(2004년 8월)
6) 인큐베이터(incubator) 가설은 Hoover and Vernon이 처음 주창하였으며, 대도시 도심이

□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설기업이 비교적 많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진구, 대구 달서구, 울산 남구, 대전 서구 등도 10~15개 내외에 불과

- 하위 76개 시·군·구에는 대한상의 DB에 등록된 창업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11)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 분포

□ 외국인 투자기업 3,180개 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21.1%인 671개가 입지

- 수도권 시·군·구에는 평균 38.0개, 비수도권 시·군·구에는 평균 4.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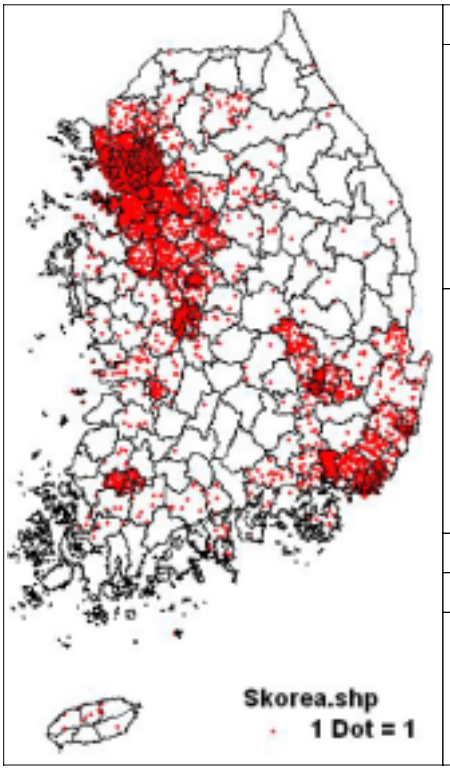
□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과 도심(중구, 종로구)에 밀집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성남, 안산, 화성, 평택시에 집중

- 그러나 경기 기 떻 떻 1

□ 기업부설 연구소의 입지는 제조업 사업체의 분포와 유사하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 높게 나타남

- 대전,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에 다수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집중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의 입지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서울 강남구(1157) ②서울 서초구(644) ③경기 성남시(417) ④경기 안산시(325) ⑤경기 안양시(313)	①대전 유성구(270) ②경남 창원시(160) ③충남 천안시(150) ④대전 대덕구(102) ⑤경북 구미시(94)
하위 5개	①경기 동두천시(2) ②경기 하남시(2) ③경기 연천군(1) ④인천 강화군(0) ⑤인천 옹진군(0)	하위 38개 시군구에는 하나도 없음
합계	7,140개(72.9%)	2,649개(27.1%)
평균	108.2개	15.8개
비고		

주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3), 단위는 개소

□ 전국 9,789개의 기업부설 연구소 중에서 72.9%인 7,140개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비중은 27.1%임

- 수도권 시·군·구에는 평균 108.2개, 비수도권 시·군·구에는 평균 15.8개가 입지

□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에 수도권 전체 대비 25.2%인 1,801개가 위치

- 그 외 서울에서는 영등포·구로·송파·금천구, 경기도에서는 수원·성남·안산·안양·화성시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비수도권에서는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대덴 유성구·대덕구에 가장 많이 입지

- 그 외 제조업체가 밀집된 경남 창원시·김해시, 충남 천안시·아산시, 경북 구미시·포항시, 충북 음성군·청원군의 집중도가 높음

- 서남권에서는 광산업 분야의 연구기능이 집적되고 있는 광주 광산구에 비교적 많은 기업부설 연구소가 입지
  · 그러나 하위 38개 시·군·구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1개도 없음

2. 지역별 산업활동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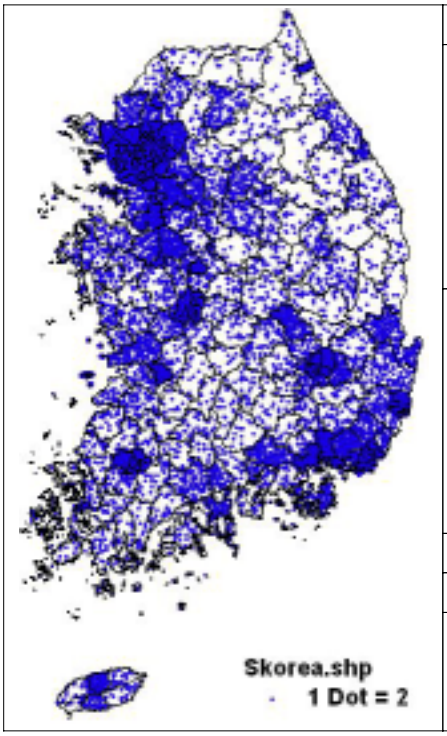
1) 인구 분포

□ 인구는 지역의 산업활동 성과를 반영하는 일반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지표

- 인구 분포는 제조업 사업체 분포와 큰 차이는 없으나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집중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학교 등 기타 인구 유인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전국의 인구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경기 수원시(1,023.9) ②경기 성남시(946.4) ③경기 고양시(840.3) ④경기 부천시(821.1) ⑤서울 송파구(649.9)	①전북 전주시(626.1) ②대구 달서구(610.5) ③충북 청주시(606.3) ④경남 창원시(517.6) ⑤경북 포항시(513.4)
하위 5개	①경기 과천시(70.7) ②인천 강화군(65.9) ③경기 가평군(55.7) ④경기 연천군(50.7) ⑤인천 옹진군(14.2)	①전북 장수군(26.5) ②강원 화천군(24.1) ③강원 양구군(22.6) ④경북 영양군(21.5) ⑤경북 울릉군(9.6)
합계	22,877천명(47.2%)	25,641천명(52.8%)
평균	346.6천명	152.6천명
비고		

주 : 2002년 기준,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 단위는 천명

2) 인구 증감률

□ 1991~2002년 사이의 인구 증감률을 보면 수도권은 19.7%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이 3.6% 증가에 그침

- 동 기간 동안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 전역과 대구광역시 주변지역, 동남권의 울산과 부산 서부 지역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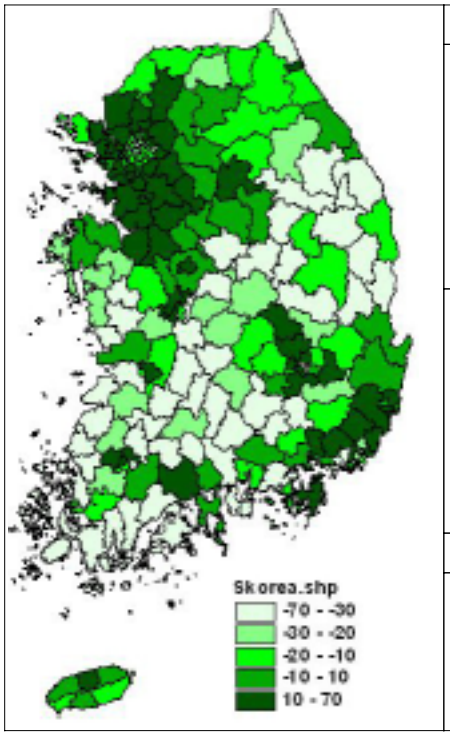
□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용인시·시흥시·군포시 등이 50% 이상 증가

- 서울 내에서는 강서·노원·강남·도봉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

- 특히 인천 동구·옹진군, 서울 중구·종로구 등 도심지역과 동대문구, 성북구 및 금천구 등은 20% 이상 감소

- 경기도 지역은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과천시·연천군 등 2개 지역만 감소

시·군·구별 인구 증감률 (1991~2002)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경기 고양시(71.6) ②경기 용인시(67.3) ③경기 시흥시(66.3) ④경기 군포시(60.4) ⑤경기 광주시(55.5)	①충남 계룡시(66.6) ②대전 유성구(65.1) ③대전 서구(53) ④경남 김해시(47.2) ⑤경남 양산시(45.2)
하위 5개	①서울 동대문구(-24.9) ②서울 종로구(-28.6) ③서울 중구(-29.9) ④인천 옹진군(-40.5) ⑤인천 동구(-58.2)	①강원 태백시(-55.7) ②대구 중구(-56.4) ③전북 진안군(-60.4) ④강원 정선군(-69.6) ⑤전남 신안군(-70.9)
평균	19.7%	3.6%
비고		

주 : 1991~2002년 사이의 인구 증감률, 단위는 %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전과 충청권 북부, 동남권에서 집중적으로 증가

- 대전 유성구·서구, 경남 김해시·양산시 등이 약 50% 정도 증가

- 중부권에서는 충남 천안시·아산시, 충북 청주시, 강원도 원주시 등의 증가세가 뚜렷

- 동남권 내륙에서는 대구 북구·달성군, 인접한 경북 경산시·구미시·칠곡군, 해안지역에서는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 등이 증가율이 높은 지역

- 그 외 서남권에서는 광주 광산구·북구, 전남 순천시 등이 전북 전주시 등이 10~20% 정도 증가

- 그러나 충청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169개 시·군·구 중에서 3분의 2정도인 112개 지역에서 동 기간 동안 인구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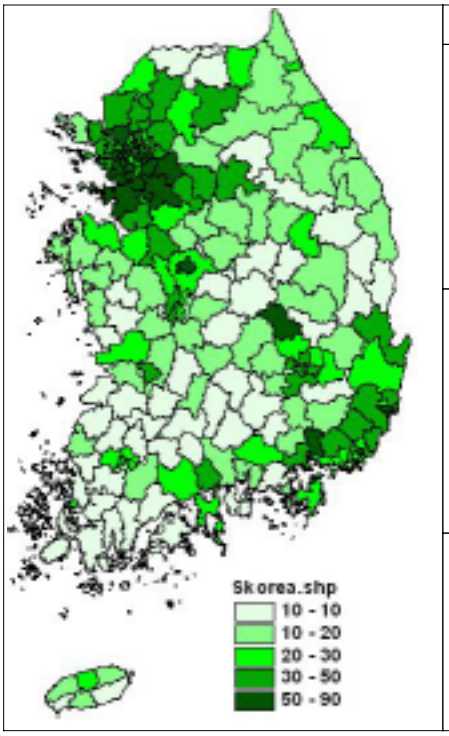
- 특히 전북 임실군·진안군, 강원 태백시, 전남 신안군 등 도서·낙후지역과 광주 동구, 부산 동구, 대구 중구 등 지방 대도시 도심지역 등은 50% 이상 감소

3)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지방의 자주적인 재정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 해당 지역 전체의 재정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는 지방의 자체적인 세입이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

재정 자립도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서울 중구(93.0) ②서울 서초구(90.5) ③서울 강남구(87.7) ④서울 영등포구(81.9) ⑤서울 종로구(75.7)		①경남 창원시(64.6) ②경북 구미시(63.4) ③충북 청주시(63.2) ④울산 남구(61.5) ⑤대구 중구(61.2)	
하위 5개	①경기 가평군(25.1) ②인천 옹진군(23.2) ③인천 동구(22.0) ④경기 양평군(20.2) ⑤인천 강화군(20.1)		①충북 보은군(9.4) ②전남 강진군(9.3) ③전남 보성군(9.2) ④전남 고흥군(8.6) ⑤전남 장흥군(8.5)	
평균 비교	서울 95.6 인천 74.4	경기 76.5	부산 69.7 대구 69.2 광주 61.6 대전 73.6	충북 32.9 전남 20.8 경남 36.3 강원 28.0

주 : 2002년 시군구별 재정자립도, 단위는 %

□ 광역 시·도 차원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95.6%로서 가장 높고 경기 76.5%, 인천 74.4%임

- 비수도권 중에서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73.6%로 가장 높지만 수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광역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남이 36.3%에 불과하며 전남은 20.8%로서 매우 낮은 수준

□ 시·군·구별로는 수도권 중에서 서울의 도심과 강남·서초구·영등포구 등이 80% 이상으로 상위 그룹에 포함

- 그 외 수도권 남부 지역과 인천지역은 50% 내외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경기도 북동부, 서해 도서 지역은 20% 내외에 머물고 있음

□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 경북 구미, 충북 청주, 충북 청주 등이 50%이상으로서 비교적 높음

- 그러나 대부분의 군지역은 20% 이하이며 전남 서남해안지역, 강원도와 경북, 충북내륙지역 등은 10%이하로서 재정력이 매우 낮음

4) 재정자립도 변화[7)]

□ 1990~2002년 사이의 재정자립도의 변화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양천구·송파구, 경기 고양시·이천시·광주시 등이 10%p 이상 증가

- 그 외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남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51개 시·군·구

7)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이 연차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1990년과 2002년의 재정자립도 수치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주의를 요하며, 지역 간의 상대적인 변화 폭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음

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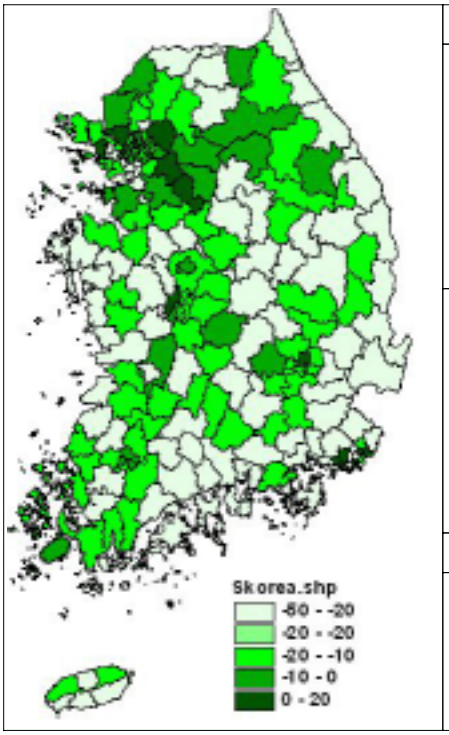
- 특히 인천 부평구, 경기 군포시·부천시·안산시 등 전통 제조업 집적지역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20%p 이상 대폭 감소

□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영도구·해운대구·강서구, 대두 북구, 대전 유성구 등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5~10%p 증가

- 그러나 비수도권 169개 시·군·구 중에서 149개 지역에서는 동기간 동안 재정자립도가 감소

- 특히 경북 안동시, 전남 순천시, 강원 속초시, 경남 마산시 등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30%p 이상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임

재정자립도 변화 (1990~2002)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서울 양천구(22.2) ②경기 광주시(16.6) ③경기 이천시(13.5) ④경기 고양시(10.4) ⑤서울 송파구(9.5)	①부산 영도구(12.3) ②부산 해운대구(8.0) ③대구 북구(6.6) ④부산 강서구(6.6) ⑤대전 유성구(6.4)
하위 5개	①인천 부평구(-22.5) ②경기 군포시(-23.5) ③경기 부천시(-25.5) ④경기 안산시(-33.2) ⑤경기 과천시(-44.5)	①경북 안동시(-37.9) ②전남 순천시(-38.6) ③경북 포항시(-43.2) ④강원 속초시(-45.0) ⑤경남 마산시(-46.6)
평균	-	-
비고		

주1 : 1990~2002년 사이의 재정자립도 변화, 단위는 %p
주2 : 울산광역시 자치구는 순위에서 제외 (90년에 자치구로 구분되지 않았음)

5) 인당 납부세액

□ 인당 납부세액은 해당 지역의 소득을 유추할 수 있는 대리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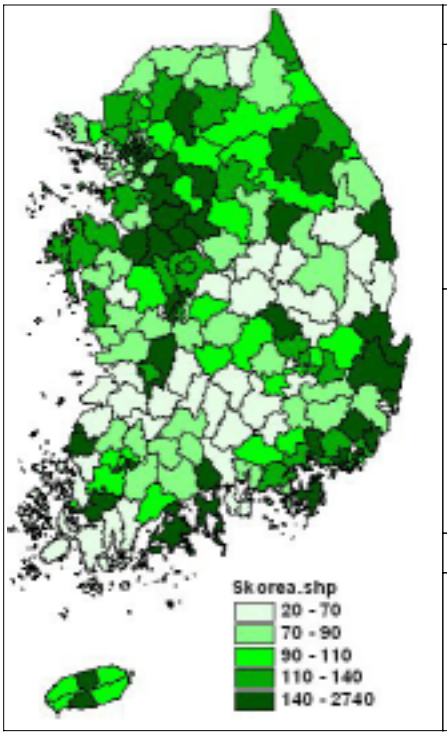
- 시·군·구별 공식적인 소득지표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인당 납부 세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

□ 수도권의 시·군·구별 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72.0천원으로서 비수도권 112.7천원의 1.5배 수준임

- 수도권에서는 서울 도심과 강남권, 수도권 남부 지역의 납부세액이 높게 나타남

-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 지역과 제조업이 발달된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남 광양 등이 비교적 높음

1인당 납부세액



	수도권	비수도권
상위 5개	①서울 중구(2,739.0) ②서울 종로(1,026.2) ③서울 강남(926.4) ④서울 서초(585.8) ⑤서울 영등포(572.4)	①부산 중구(513.4) ②대구 중구(509.3) ③강원 정선군(306.7) ④부산 강서구(248.9) ⑤부산 동구(235.5)
하위 5개	①인천 연수구(39.2) ②인천 남동구(34.4) ③인천 남구(32.2) ④인천 부평구(27.9) ⑤인천 계양구(24.8)	①전북 장수군(50.3) ②울산 동구(42.1) ③전남 신안(39.9) ④울산 중구(36.4) ⑤대구 달성군(34.5)
평균	172.0천원/인	112.7천원/인
비고		

주 : 시군구별 1인당 납부세액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단위는 천원/인

3. 분석결과 요약 (Key Findings)

산업 활동의 공간 분포 요약

	분포비율		시·군·구 평균		분포 특징(핵심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제조업 사업체수	56.3%	43.7%	962개	287개	서울-대전축, 남동권 해안·내륙 지역
증감률 (%, 90-02)	55.5%	60.5%	-	-	수도권 남부, 서울-대전축, 울산·대구 주변지역
증감규모 (개, 90-02)	55.3%	44.7%	343개	107개	수도권 남부, 인천 남부, 경남 창원·김해, 충남 천안
제조업 종사자 비율	-	-	6.3%	5.2%	수도권 남부, 충청권 북부, 동남권 대도시 주변
비율변화 (%p, 90-02)	-	-	-2.89%p	-0.05%p	수도권 동남부·북부, 부산·대구 주변, 김해·구미 등
제조업 인당 생산액	-	-	166.7 백만/인	198.0 백만/인	인천 동남부, 경기 서북부, 경북 포항·구미, 전남 여수·광양, 충남 서산, 울산 남구 등
증감 (90-02)	-	-	119.0 백만/인	143.3 백만/인	생산액 분포와 유사
광공업용 건축허가(02)	24.1%	75.9%	6,081㎡	7,350㎡	충청권 북부지역, 인천 남동구, 경기 남동, 대전, 강원 원주시
상위 1,000대 기업분포	72.6%	27.4%	11.0개	1.6개	서울 도심·강남권, 경남 창원·마산, 경북 구미·포항, 충남 천안
벤처기업 (2004)	69.5%	30.5%	86.4개	14.9개	서울-대전축, 동남권 해안·내륙 등 1+2 분포 패턴
신설기업 ('04 상반기)	80.1%	19.9%	21.3개	2.1개	수도권 1극 분포, 서울 강남권과 도심, 일부 지방 대도시
외국인 투자기업	78.9%	21.1%	38.0개	4.0개	서울-대전축·동남권 해안 등 2극 분포, 서울 강남권, 경기 남부, 충남 천안, 경남 창원·마산
기업 부설 연구소	72.9%	27.1%	108.2개	15.8개	서울-대전축, 동남권 해안·내륙 등 1+2 분포 패턴(벤처기업 분포와 유사)

□ 산업 활동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서 두드러진 점은 산업 활동의 지역적 편중이 심하며 경로의존적(path-dependent)인 발전 경향이 강하다는 점임

-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 등 전통 주력산업의 중심지역에 연관 산업의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서남권 남부지역, 충청권 서부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플랜트, 조선 산업 중심의 집적지역이 성장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의 산업활동 침체는 지속

□ 일반 제조업 보다는 첨단기업이나 대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집중도가 더욱 높음

- 일반 제조업 사업체나 종사자의 수도권 비중이 50%대인데 비하여 벤처기업, 외투기업, 상위 1,000대 기업의 비중은 70% 이상

- 2004년 신설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80.1%, 72.9%로서 지방의 기업 신설 또는 혁신 환경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음

□ 기존 산업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산 패턴이 나타남

- 새로운 산업 거점이 등장하기 보다는 기존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경제권역이 확산되는 현상이 뚜렷

-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 대전과 주변지역 등 서울~대전축은 이미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연결되고 있음

- 동남권의 경우도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서쪽의 김해, 창원, 진해, 동쪽의 양산, 포항, 경주 등이 연결

- 동남권 내륙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경산, 칠곡, 구미, 김천 등이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통합되고 있음

□ 제조업의 공간적 확산 또는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의 제조업 사업체가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음

- 대도시의 경우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비율 감소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
  - 도시형 서비스업의 발전, 첨단 고부가가치와 등 산업 구조의 고도화의 긍정적 측면
  - 제조업의 지나친 이탈로 경기변동의 충격에 취약, 안정적 성장의 저해, 제조업-서비스업간의 시너지 부족 등의 부정적 측면

- 산업의 공간적 분업 현상 심화
  - 수도권, 지방 대도시는 서비스산업, 신설기업, 첨단기업의 중심지
  - 비수도권, 대도시 주변지역은 전통주력 제조업, 성장·성숙단계의 기업, 대형 설비 위주의 플랜트 산업 등

□ 충청권 북부, 강원도 서부 등 수도권 인접지역의 산업 집적 증가

-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정책의 영향[8]으로 천안, 아산, 음성, 진천 등 충청권 북부지역과 원주, 홍천 등 강원 서부지역의 기업 입지가 증가

-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한 이러한 산업 집적 현상은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외연적 확대를 초래

□ 인구의 경우 아직 비수도권이 52.8%로서 수도권 보다는 높지만 과거 10여 년간의 증감률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음

- 이는 공간적으로 산업 활동의 집중 패턴과 인구의 입지 패턴이 유사하게 수렴하고 있음을 시사

□ 산업 활동의 공간적 집중에 따른 지역별 재정력과 소득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8)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그 외에 수도권에 인접한 저렴한 지가 및 인건비 활용, 대전지역의 R&D 시설 활용 등의 요인도 작용하였음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

산업 활동 성과지표의 공간 분포 요약

	분포비율		시·군·구 평균		분포 특징(핵심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분포 (2002)	47.2%	52.8%	346.6 천명	152.6 천명	제조업 사업체 분포와 유사,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도가 높음
증감률 (91-02)	-	-	19.7%	3.6%	경기도 전역, 충청권 북부, 동남권 울산·부산 외곽, 대도시 도심과 군지역은 대부분 감소
재정자립도 (2002)	-	-	서울 95.6%	전남 20.8%	서울 도심·강남권, 경기, 광역도 지역은 매우 낮음(10% 이하)
증감 (90-02)	-	-	-	-	서울 강남권·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 지방중소도시들은 30% 이상 대폭 하락
인당 납부세액	-	-	172.0 천원/인	112.7 천원/인	서울 도심·강남권, 수도권 남부, 지방의 제조업 중심도시

4. 주요 지표의 상관성(correlation)

□ 인구, 재정력, 소득 등 지역경제의 성과의 차이는 산업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 따라서 여기서 분석한 제조업 분포, 신설기업, 벤처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 몇 개의 단편적 요인으로는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움

- 그러나 지방의 경우 아직 제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간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성과지표와의 상관성을 파악

□ 먼저 제조업 사업체수의 분포는 인구와 인구 증감률,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성(0.5내외)을 보임

- 또한 사업체수가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 역시 상관성이 있는 것(0.41)으로 나타났음

- 즉 제조업 사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거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비교적 높음

주요 지표간의 상관계수

성과변수 / 주요 설명변수	인구 (02)	인구 증감률 (91-02)	재정자립도 (02)	재정자립도 변화 (90-02)	인당 납부세액 (03)
사업체수(02)	0.53	0.45	0.54	0.10	0.24
사업체수 증감(90-02)	0.26	0.41	0.32	0.06	0.11
종사자수(02)	0.53	0.53	0.55	-0.05	0.09
생산액(02)	0.39	0.43	0.47	-0.15	0.05
인당 생산액(02)	0.04	0.13	0.10	-0.19	-0.01
건축허가(02)	0.04	0.10	0.02	-0.06	-0.03
상위 1,000대 기업수(04)	0.28	0.07	0.58	0.13	0.77
벤처기업(04)	0.51	0.28	0.59	0.15	0.32
신설기업(04, 상반기)	0.44	0.10	0.60	0.25	0.55
외투기업(04)	0.27	0.09	0.52	0.11	0.62
기업부설 연구소수(03)	0.49	0.27	0.59	0.12	0.32

□ 이러한 상관성은 제조업 종사자수 지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제조업 종사자 비율과 인구, 인구 증감률,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성은 0.5 이상으로 높은 편임
  - 제조업 인당 생산액 지표도 상관성이 다소 낮지만 이와 유사

□ 그러나 제조업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인당 생산액과 납부세액과는 상관성이 높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은 인당 납부세액(소득의 대리변수)이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등 타 산업 부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

□ 중·대기업인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분포는 인구 보다는 지방의 재정력이나 인당 납부세액 등 소득관련 지표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남

- 상위 1,000대 기업 분포와 재정자립도와의 상관계수는 0.58, 인당 납부세액과는 0.77로서 매우 높음

- 즉, 대기업의 입지는 지역에서는 세수증대와 주민의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의 경우에도 유사

-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와 재정자립도, 인당 납부세액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60, 0.55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5. 분석결과의 시사점

□ 기업이나 산업의 입지 패턴은 그것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지식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전통 제조업과는 달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입지요인(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음

□ 산업입지의 이러한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t)' 발전 패턴은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도 유사한 맥락

- 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산업 분야와 연관 산업의 집적, 연구개발 및 지원서비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핵심 성공요인으로 함

- 따라서 산업 클러스터의 경우도 기반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식(green field형 투자방식)으로서 형성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성공의 가능성도 낮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 기업이나 산업 활동의 입지는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단계이며,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임

- 다만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에 있어서 클러스터의 이점이 점점 더 강하게 작용
  ・예,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조립산업, 표준화된 단계의 단순 생산·조립 공장 등 입지가 비교적 자유로운(foot-loose) 기업은 Green Filed형 투자가가 가능

□ 특히 지역 발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 기관의 입지는 더욱 제한적

- 일반 제조업체에 비하여 연관 산업 파급효과나 고용효과가 큰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등 핵심 생산 및 R&D 시설의 입지는 더욱 집중도가 높음

□ 따라서 70~80년대의 산업입지 패러다임으로는 지방의 새로운 발전 거점이나 발전축을 형성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고 있음

- 정책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할 경우에는 수급 불균형, 자원 배분의 왜곡 등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침

- 80년대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의 패턴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향후의 산업 입지 전략은 보다 중장기적이고 엄격한 입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업종별 입지요인의 차별적 적용, 기업성장 단계별 입지 전략, 발전 경로의 차별화(경쟁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발전전략 지양) 등

- 특히 기술지향적 창업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의 유치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다양한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

Ⅳ. 투자사례를 통한 입지결정요인 분석

1. 주요 투자사례

① 삼성전자: 생활가전라인 광주이전

□ 삼성전자와 광주시의 윈-윈(win-win) 전략 추진

- 광주시는 '전자산업진흥계획'을 마련, 2010년까지 광주·전남지역을 첨단 가전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 2004년부터 5년간 산업인프라 구축에 1,055억원을 투입할 계획

- 삼성전자도 주력 제품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을 주도하는 홈네트워크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 생활가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삼성전자는 지역특성화전략에 의거, 수원공장의 생활가전부문을 모두 광주지역으로 이전키로 하고 광주시에 협조를 요청

□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의 광주 이전

- 2004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생활가전부문인 세탁기 2개 라인, 에어컨 7개 라인을 광주사업장으로 이전

- 광주사업장은 2004년 9월 현재, 20개 이상의 생산라인을 갖춘 대규모 생산단지로 성장
  · 기존 냉장고 3개 라인, 김치냉장고 2개 라인, 청소기 7개 라인과 컴프레서 부품공장 등이 입지

- 삼성전자는 광주시의 배려로 생활가전 생산시설 통합을 6개월 만에 조기 완료하여 경영효율화를 달성

□ 광주시의 유치 노력

- 광주시는 2003년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광주이전, 유치를 적극 추진

- 광주시는 삼성전자 '이전지원특별전담반'을 구성(2004.8)하고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각종 인허가, 구인, 자금지원 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 광주 평동 산업단지 내에 4만 8,000평 부지를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특별 집적화단지로 조성, 저렴하게 분양

- 단지 내 도로 개설도 조기에 끝내 공장이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

□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신규고용 창출효과까지 더해 1만여 명의 고용 및 경제인구 이동 효과를 기대

- 광주시는 삼성전자 제품구매 운동,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 등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생활가전연구소 핵심 기술과 광주사업장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0년 광주를 생활가전 생산기지로 변모시킬 계획

□ 시사점

- 삼성전자가 생활가전라인을 광주지역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특정지역에 생산라인을 집중하기 위한 지역특성화 전략의 일환임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노력도 입지 결정에 영향

②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의 제주도 이전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4년 3월 18일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제주지사 등과 본사 이전을 위한 협약 체결

- 처음에는 연구소 이전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주도에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임에 따라 본사 이전까지 고려하게 됨

□ '즐거운 실험'으로 명명한 제주 이전 및 지역공헌 사업 프로젝트 추진

- "미국의 IT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이전해 실리콘밸리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이재웅 대표)

- 제주도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어 근무환경과 생활의 질이 높다는 점이 매력

□ 추진과정

- 2004년 3월 전격적으로 본사 제주 이전계획을 발표

- 2004년 4월 연구개발팀(Net Intelligence Lab) 16명이 제주로 이전

- 2004년 6월 미디어본부 소속 3개팀(미디어전략팀, 미디어기획팀, 미디어개발팀) 38명의 인력을 이전

- 2004년 8월 현재 제주에는 2개 본부, 1개 연구소에 총 70여명의 직원이 상주해 전체 직원의 약 10%가 이전

- 2004년 11월말 제주도 본사사옥 착공 예정(제주시 오등동, 약 4,000평 규모)

□ 향후 추진계획

- 다음은 1차 사옥이 완공되면 본사에 근무하는 100명 안팎의 직원을 제주로 이주 시켜 이미 제주에 파견돼 있는 미디어본부, 미래전략본부 소속 직원 70여명과 합류 예정

- 다음은 제주 IT 산업 발전을 위한 5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지역혁신 시범화 사업(RIS사업), IT 협동 연구센터 설립, 다음 제주 지역서비스, 제주 현지 대학생 인턴 사원 모집 등

□ 시사점

- 인터넷업계 특성상 업무의 상당부분을 e-메일, 메신저 등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지방이전에 따른 어려움이 일반 '굴뚝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쾌적한 근무환경과 생활의 질 향상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조건

- 적극적인 지방정부 육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육성노력과 혜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

<NHN 연구소 춘천 이전시 지원 사례>
- NHN 본사는 수도권, 연구소는 강원도 춘천으로 이전할 계획
- NHN 연구소는 춘천시와 이전 협약 체결 (2004. 9.)
- 강원도가 부지 매입지의 50%를 도비로 지원, 부지 내 도유지 2,000평을 무상 사용
- 시설투자비, 고용촉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
- 전담팀을 구성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처리를 최대한 단축

③ LG필립스: 파주 LCD공장 신설

□ 경기도는 대만과 치열한 경쟁 끝에 LG필립스 LCD 공장을 파주지역에 유치하는데 성공

- 2003년 2월 MOU, 11월에는 MOA(투자협의서)를 각각 체결

- 2004년 3월 파주시 월롱면 덕운리 51만여 평에 LG필립스 LCD 본공장과 연구시설이 입주할 LCD산업단지 중 'TFT-LCD 7세대 공장' 착공
  · 2005년 6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 LCD협력단지가 완공되는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할 예정

□ LG필립스 LCD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6㎞ 가량 떨어진 문산읍 당동, 선유리 58만평에 LCD협력단지를 건설

- 뒤늦게 시작된 협력단지 조성을 본단지 완공에 맞춰야만 본공장의 7~8세대 TFT- LCD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 가능

- 협력단지의 입지가 본단지와 거리가 있는 문산읍으로 결정된 것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설정돼 있어 행정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

□ LCD협력단지 건설과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과 경기도의 대응

- 문산읍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3만여 명의 문산읍 주민 가운데 1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LCD협력단지의 백지화를 주장
  · 부적절한 위치 선정, 환경오염 가중, 행정절차 무시 등을 주장

- 경기도는 주민들의 주장 대부분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주민설득 작업을 진행 중
  ·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 경기지방공사와 파주시는 2007년까지 5,700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
  · 단지 내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를 비롯한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소 등을 설치

□ 향후 10년간 LG필립스LCD와 협력업체들이 20조원을 투자, 2만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006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연구개발(R&D) 센터를 건설할 계획
  · 향후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를 유치할 방침

- 경기도는 2006년 LG필립스LCD사의 1단계 공장(P7)이 정상 가동되면 연간 3조원 이상의 매출과 매출의 95%가 수출될 것으로 예측

- 경기도는 협력업체 단지에 일본의 LCD부품업체 등 40~50개의 업체를 유치해 파주 일대를 세계적인 'LCD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
  · 총 4,000여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3월 착공돼 2007년 말 완공

□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외자유치 노력

- 경기도가 2004년에만 19건(4억 8,9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표현되는 투자유치 노력이 주효
  · 경제 살리는 도로 조성, 기업 활동 발목 잡는 공장설립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공단 조기 확보 등
  · 경기도는 공단 조성 기간 단축을 위해 '문화재 발굴 대책반'까지 운영

- 산업자원부는 15개 정부 유관기관을 모아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합동지원단'을 구성
  · 여기에는 산자부와 경기도는 물론 재정경제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포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정부에 건의, 2002년 2월 9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 초스피드 행정절차

- 경기도는 LCD공장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개발계획 수립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의 행정절차를 1년 만에 "초스피드"로 완료

- 통상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각종 복잡한 행정절차로 실시계획에서 승인까지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로 단축

- 파주시 등 경기도 공무원들은 "분묘대책반"까지 가동해 공장부지 내의 묘지이장을 독려하

□ 인·허가권 시·군 이양

- 2004년 4월 "보다 나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시·군으로 이양
  · 주요 권한 위임사항은 지방산업단지 관리 권한, 중소기업체 협동화사업 계획 승인 권한 등임

- 공장설립 인·허가를 대폭 단축시켜 기업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제조업 중심의 신용보증 확대, 기업자금지원 대폭 강화, 첨단제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

□ LG필립스LCD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 LG필립스LCD는 파주가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이미 개성공단이 건설되는 등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이점이 많은 점에 착안

・남북교류가 확대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파주지역은 자유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이 용이하고, 경의선 복선화 공사로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 접근성이 양호

-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이 유리

- 생산라인과 협력업체 및 R&D 센터가 한 지역에 집적된 “글로벌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서의 장점

④ 충청남도: 자동차 부품업체 투자유치

□ 충남도는 독일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인 헬라베어社를 서산에 유치

- 국내 자동차 헤드램프 분야의 선두업체인 삼립산업(대구소재)과 독일의 헬라베어(Hella-Behr)가 서산에 주식회사 SHB를 합작으로 설립
  ・2005년 1월부터 조명, 엔진 냉각, 차체 뒤틀림 방지 연합장치인 ‘프론트 엔드모듈’을 생산

- 총 투자규모는 2,500만 달러로 두 회사가 각 50%씩 분담했으며 공장이 완공되면 136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삼립산업은 공장부지 4,750평을 SHB에 임대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휴업중인 공장을 매입해 공장증축 및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진행 중

□ 충남도는 일본계 자동차 부품업계인 덴소풍성 공장을 홍성에 유치

- 덴소풍성(주)은 일본의 도요다자동차 계열인 (주)덴소와 한일합작 법인으로 자동차부품 전문제조 공장

- 홍성지역에 덴소풍성을 유치해 자동차용 첨단 전자장치부품(자동차 엔진용 모타 등) 생산을 위한 제2공장(1만 5,000평 규모)을 착공
  · 4,600만 달러를 투자해 2004년 5월 착공하여 2005년 말 준공 예정

- 600여명의 고용창출과 더불어 30~40개의 협력업체가 홍성으로 이전하여 원활한 부품공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충남지역은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 중이며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중국진출의 교두보로서 최적지로 판단

- 인근에 현대자동차(인주), 기아자동차(서산), GM대우자동차(군산) 등 국내 3대 자동차회사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동차 부품소재 집적단지로 유리
  · 서산에서 당진, 아산을 거쳐 천안으로 이어지는 오토 밸리에는 현대자동차 등 연간 246만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능력을 갖추고 있음

2. 사례조사의 시사점

□ 주요 기업이나 산업의 이전 또는 신규투자 사례를 통해서 본 입지결정요인은 다음과 같음

- 투자사례별로 기업의 업종 및 규모, 성장단계, 연관 산업의 특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입지요인도 공통요인과 차별화된 요인으로 구분됨

□ 지정학적 입지요인

- 고속도로와 공항, 항만과의 인접성 등은 기업의 물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LG필립스 LCD공장은 남북교류가 확대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파주 LCD 공장부지와 북한 개성과의 거리는 15㎞에 불과

□ 클러스터의 이점

- 관련 산업이 얼마나 클러스터화 되어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입지가 결정되며, 특히 부품산업의 경우 납품 기업과 관련 연구소 등의 위치가 중요

- 파주~수원~평택에 세계 최고의 LCD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경기도는 지난 2년간 50개 해외기업으로부터 118억 7,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
  · 삼성, LG 등이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한 결과, 이들 기업에 부품 원료 등을 납품하는 해외 기업들이 인접한 지역에 직접 공장을 신축

- 자동차 부품업체의 충남 서북부지역 투자는 인근에 현대자동차(인주), 기아자동차(서산), GM대우자동차(군산) 등 3대 자동차 회사의 영향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노력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펼치며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하느냐도 주요한 입지결정요인 중의 하나

- 경기도는 일본의 스미토모화학을 평택에 유치하면서 민간기업과 경기도 땅을 맞바꿔 유치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

□ 우수 인재의 확보

- 다국적 첨단기술 기업일수록 고급인력이 많고 전반적인 기업 인프라가 가장 뛰어난 곳을 선호

-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과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등장

Ⅴ. 정책제언

1. 기본 방향

입지정책에서 비용 최소화와 가치 극대화 요인을 동시에 충족

□ 산업이 발전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은 비용 최소화와 가치 극대화의 기준에서 항상 선택이 이루어지게 됨

- 수도권은 물류, 거래비용, 네트워크 비용 등의 측면에서 지방보다 상대적인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으며
  · 고급인력, 산학협력, 주거 및 문화 인프라, 클러스터 이점, 창업보육,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에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유

- 반면 지방의 경우는 인건비, 지가, 주거 및 교육비, 인센티브(세제 등) 등에서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으나
  ·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가 않음

비용 최소화와 가치 극대화의 비교

	비용(cost) 최소화	가치(value) 극대화
수도권	· 물류 (교통) · 거래비용 · 네트워크 비용	· 고급인력, 산학협력 · 주거환경(문화 인프라) · 클러스터 이점 · 창업 보육, 비즈니스 서비스업
지 방	· 인건비, 지가 · 주거 및 교육 · 인센티브 (공공)	· 어메니티(amenity)

□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비용 절감, 비수도권에서는 가치 증진을 위한 입지요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정책의 관심 영역임

- 현재의 상황은 수도권은 가치 극대화의 이점이 지방의 비용 최소화의 이점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지속

- 그러므로 수도권의 비용절감 보다는 지방의 가치증진을 위한 입지요인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지역경제 권역의 확대 및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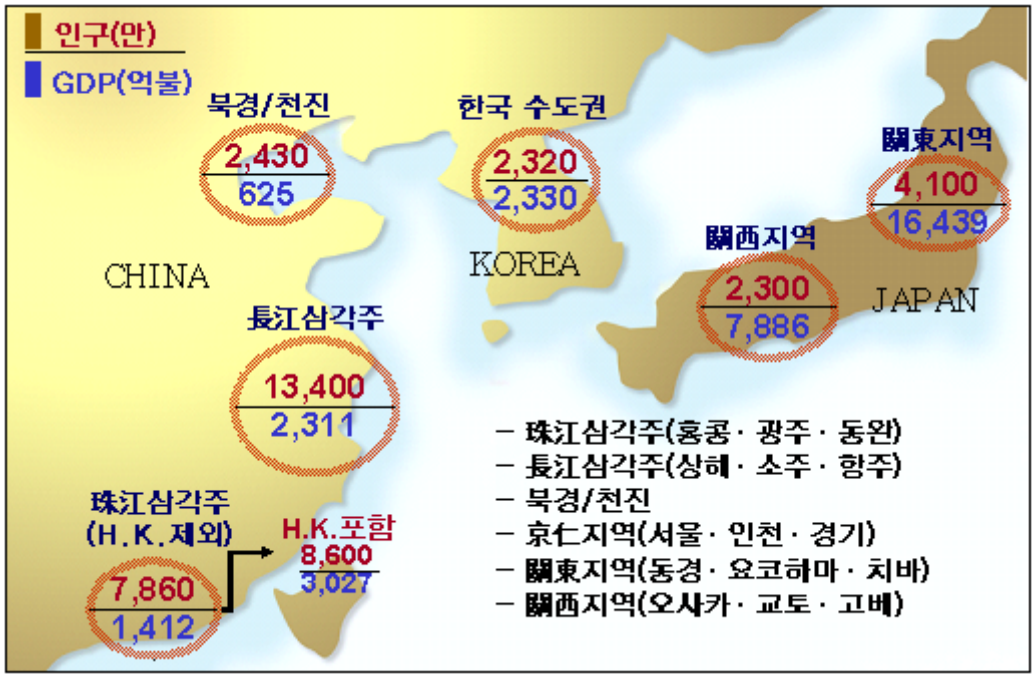
□ 고속 교통망의 발달, 기존 경제 거점의 외연적 확산 등으로 지역 경제권역이 확대되고 있음

- 기존 경부축 상의 서울~대전 권역과 대구~부산 권역은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

-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천안아산은 34분, 서울-대전은 49분이 소요

□ 특히 동북아의 주요 경제권역과의 경쟁우위의 확보 측면에서 한국도 일정 규모의 이상의 경제권역을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동북아 6개 경제권역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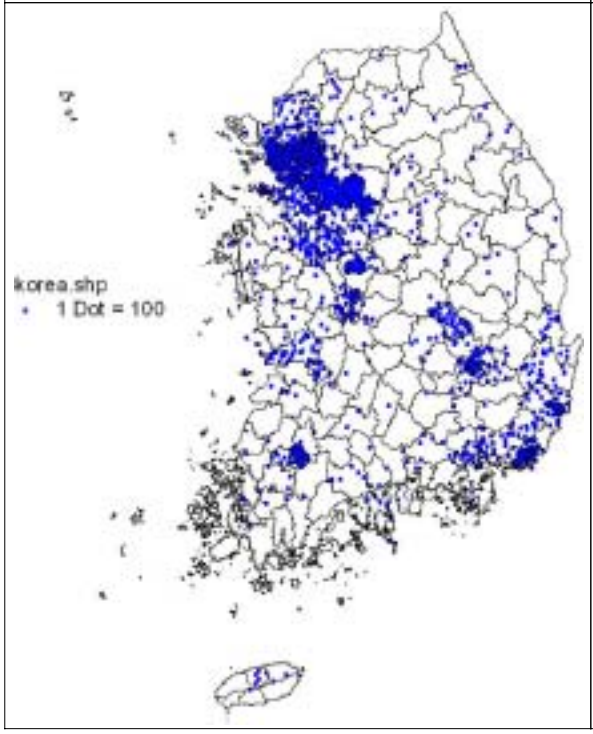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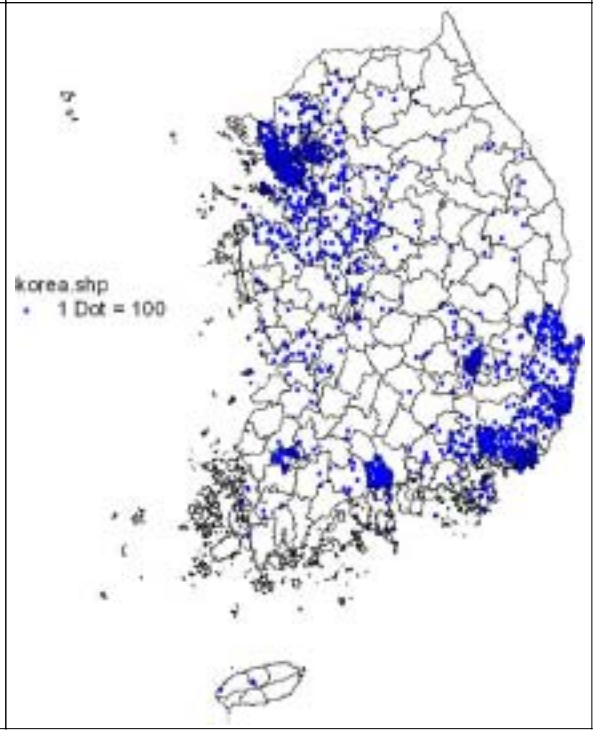
- 주변지역의 핵심 경제권역의 위상을 감안할 때 글로벌 관점에서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한국의 지역경제 발전축을 수도권과 충청권이 연결된 서울·인천·대전권과 동남해안과 내륙이 연계된 동남권 등 2극 체제로 광역화

- 서남권과 강원권은 제조업이나 이와 연계된 IT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발전 벨트를 형성
  · 수도권과 동남권 등 기존 산업지역과 동일한 발전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성공가능성이 적음

□ 서울·인천·대전권은 지역경제권의 확대 및 특화전략으로 동아시아 주변의 경쟁지역 대비, 지역경제의 규모 및 질적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

주요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

반도체 클러스터	금속 및 철강제품 클러스터
	

자료 :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2002
주 :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를 기준

- 동남권은 전통 주력산업 허브로 육성
  · 우수한 주력산업 생산과 물류 기반을 활용, 제조업 중심의 특화된 클러스터를 형성

- 서남권과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소프트 관광·문화 벨트의 형성
  · 서남권과 강원도에 소프트 관광, 문화거점을 형성하고 백두대간으로 따라 서남해안 관광벨트로 연계

균형발전의 출발은 지역의 기업활력의 제고

□ 지역경제의 성과의 해당 지역의 기업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 기업이 1개 증가하면 취업자 수 73명, 산업 생산액 77억원, GRDP는 58억원이 증가 (대한상의, 2004. 9)

- 해당 산업의 직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유발하여 고용, 생산, 부가가치, 세수의 증대에 기여

□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공투자를 효율화

-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혁신 클러스터의 육성 등은 지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수단임

□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는 해당 업종의 클러스터 형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

- 일본 미애현은 해당 지역을 LCD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크리스탈 밸리” 구상을 발표
  · 일본의 대표적 LCD 기업인 샤프의 경영진을 설득, LCD 일관공장의 유치를 성사

- 광주광역시도 지역의 가전산업 육성계획을 발표,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이전을 독려

2. 주요 정책제언

개발방식의 다양화로 입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주변 경쟁국 대비, 높은 산업 용지 가격으로 인하여 입지 경쟁력이 저하

- 중국, 동남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는 산업 공동화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외자유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산업단지의 분양가 비교

구 분	산업단지	분양가(천원/평)	비교지수
한 국	안정 국가산업단지	400	100
	북평 국가산업단지	267	67
	광주 첨단산업단지	404	101
	양문 지방산업단지	967	242
영 국	7개 공단 평균	203	51
일 본	기요하라 공단	1,290	323
중 국	후춘 산업단지	79	20
	소주 산업단지	190	48
	상해(푸동) 산업단지	78	20
말레이시아	쿨림 첨단기술단지	167	42

주 : 한국의 국가, 지방산업단지는 2003년 12월말 기준

자료 : KOTRA,「중국의 주요 개발구」, 2002, KOTRA,「세계 비즈니스 정보」, 2002, 통일부,「개성공단 1단계 사업-협력사업 승인해설 자료」, 2004, (김영수,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방안", 산업연구원, 2004, p26에서 재인용)

□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

-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용지 공급, 기업도시의 개발 등에 민간의 참여 폭을 확대
  - 민간기업이 공장용지를 실수요에 기초하여 개발 시 인접한 공영개발 산업단지 공급가격의 3분의 2 수준으로 개발 가능(산업연구원, 2004)

- 도시개발 방식에 있어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경합체제 형성
  - 산업용지의 수급 불균형 완화, 공공부문의 자금 부담 경감, 복합적 용도

의 토지 공급 등을 촉진하는 기업도시 개발을 독려

- 공공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입지비용 절감을 유도하되, 중장기적으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

□ 임대용 공장부지 공급의 확대

-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산업용지 중에서 임대용 부지의 비율은 2.8%에 불과 (한국산업단지공단, 2003. 8)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용지 이외에 국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용지는 거의 전무한 실정

- 낙후지역의 기업 유치, 클러스터에서의 핵심 기업 유치, 지방의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전략적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임대용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

산업의 U-턴을 촉진

□ 90년대 이후의 촉발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역공동화(U-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저임 노동력을 찾아 중국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했던 일본기업들이 최근 기존 해외거점을 폐쇄하거나 감축하고 국내로 U턴하는 사례가 발생

□ 산업 공동화를 완화하고 U-턴을 촉진할 수 있는 입지정책이 필요

- 산업 U-턴의 주요 이유는 자국 내에서 고부가 제품의 생산, 숙련 노동력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기술유출 방지 등임

-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이나 업종의 입지적 요구를 수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나 개발방식 등에 해당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여 충족하는 것이 중요

핵심적이고 소프트한 입지요인 확충에 주력

□ 입지 경쟁력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의 평균적인 수준 향상을 꾀하는 것은 비효율적

- 사례연구에서 보듯이 기업투자 입지 결정시 각 사례별로 소수의 핵심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 기업의 업종, 기능, 성장단계, 기업의 경영 이념 등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입지요인 확충이 중요

- 핵심적 규제 완화, 대규모 부지의 확보, 종업원을 위한 양호한 배후도시 건설, R&D 시설과의 접근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양호한 인력 풀의 확보 등이 핵심요인

□ SOC 등 물리적 조건을 확충하는데서 탈피, 입지 요인의 소프트한 측면에 대한 관심 증대

- 지가, 물류비, 인건비 등 코스트 경쟁력은 기본적인 필요 조건

- 조세감면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인하여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는 추세

□ 따라서 노사문제, 지역의 이미지,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등 소프트한 측면의 입지 요인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

- 잠재적 투자기업은 해당 지역의 노사관계의 분위기, 기업에 대한 정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애로 청취, 현장에서 해결 등) 등을 점점 중시

- 최근의 와자유치 사례에서는 투자유치 기관의 사전 지역 마케팅을 통한 잠재 투자자 탐색 및 유치활동이 증가

· 투자지역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 유치기관의 마케팅 활동이 결정적 영향을 발휘 (예, 경기도와 경남도의 외자유치, 충남도의 자동차부품업체 유치 사례 등)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체계 구축

□ 대학을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혁신주체로 육성하고 공공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산(産)·학(學) 연계 활동 강화

- 창업 및 보육뿐만 아니라 기업설립 및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보다 적극적인 산업화 활동을 전개

□ 네트워크가 밀접한 기업 간의 산(産)·산(産) 연계 모델인 '기업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

- 기업 커뮤니티는 클러스터 성공의 핵심 요인인 거래(trade), 인력,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형성 및 진화를 촉진

- 기업 커뮤니티는 물리적인 집적(동일 건물이나 인접하여 위치) 또는 매개체(사업자 단체, 업종별 포럼, 네트워크 중개기관 등)에 의하여 광역적으로도 형성이 가능

계획을 통한 클러스터의 창출은 역량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

□ 기존 집적지는 기업 입지에 대한 구심력이 매우 크게 작용

- 집적 경제(도시화 경제와 지역화 경제)의 이익으로 인하여 기존 산업 집적지는 외부 불경제 효과가 집적 경제의 이익을 충분히 상쇄하기 전까지는 산업의 집적이 계속됨

- 따라서 정부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통하여 새로운 클러스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집적지의 집적 이익에 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력(attraction)이 필요

□ 신규 클러스터의 창출은 창업 및 보육 시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등 기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출발해야 함

- 기존의 유사한 클러스터와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지방의 경우 성숙 또는 쇠퇴단계의 클러스터를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유효
  · 성숙, 쇠퇴단계의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거나 조기에 대체산업을 선정하여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

- 대구의 섬유산업, 부산의 신발산업 등 지방 대도시의 전통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성급한 대체산업 육성보다는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가 효율적
  · 우수한 인력 풀, 부품, 소재기술의 활용 등 클러스터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틈새시장을 확보, 지역 고용 및 소득 창출 기반을 유지

- '첨단'의 환상(high-tech fantasies)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구두선에 그칠 우려
  · '첨단'은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것, 비일상적인 것(non-routine)이 핵심

- 강원 영월·태백 등 낙후지역의 경우는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이었던 석탄산업을 대신할 대체산업을 육성

□ 중앙정부 주도의 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소수의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덕 R&D 특구 구상도 역량이 분산되지 않게

대도시 주변지역에 제조업 입지공간을 확보

□ 대도시 경제를 지탱하였던 전통 제조업의 공동화가 진행

- 전통 제조업은 대도시 내에서 서비스업 또는 주거기능과 경합을 벌이면서 점점 외곽지역으로 밀려남

- 전통 제조업은 대도시 중심/부도심 → 대도시 외곽 → 주변지역 → 해외이전(중국/동남아)로 입지이동 경로를 보임

□ 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대도시 외곽 또는 주변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 인력, 문화 등 대도시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면서 제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이 필요

벤처기업의 육성은 연구소 입지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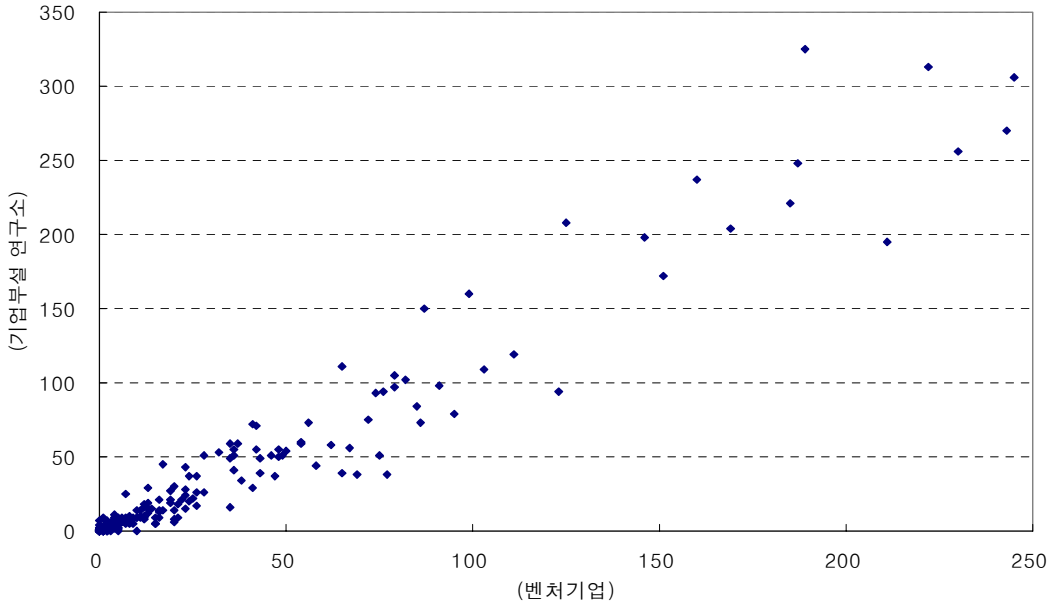
□ 기술 창업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은 연구소 입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 벤처기업 입지와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와의 상관계수는 0.9886으로서 입지분포 패턴은 거의 같음
  - 반면, 벤처기업과 일반 제조업 사업체 입지와의 상관계수는 0.4278에 불과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은 연구기능과의 밀접한 연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등 연구기관 집적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실시
  -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미약한 지구는 재조정

벤처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입지 분포



외자유치와 국내 매출액 상위기업과의 입지적 연계를 고려

□ 외자유치는 내국기업의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과 분리되어서는 곤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과의 입지 분포는 매우 유사
  - 상관계수는 기업 수 기준으로는 0.9382, 종업원 수 기준으로는 0.9277

-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일반 제조업 사업체 입지와의 상관계수는 0.2718에 불과

외국인 투자기업과 매출액 1,000대 기업 입지 분포와의 상관계수

구 분		상관계수(Corr.)
외국인 투자기업 수	상위 1,000대 기업 수	0.9382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 수	상위 1,000대 기업 종업원 수	0.9277

-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이유도 있지만 국내 중·대기업과의 입지적 연계의 필요성, 유사한 입지 니즈 등에 기인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정책은 국내 상위기업과의 입지적·기능적 연계가 필요

- 외국인 기업 전용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등 외자유치를 위한 입지는 국내 대기업 집적지역에 인접하여 제공 또는 유도

-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지역 주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입지를 제공

급격히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확대

□ 지방 대도시 내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가 심각

- 대전 중구와 동구 및 북구, 대구 중구 및 북구, 광주 동구 등 지방 대도시 도심지가 급속히 쇠퇴

- 시청을 포함한 주요 관공서, 학교 등 인구 집중시설의 외곽 이전, 제조업 사업체의 확산, 도시 외곽지역의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 등의 영향

□ 서남권과 경북 북부, 강원도 일부 지역도 인구가 급감

- 강원 태백 및 정선, 전북 진안 및 임실, 전남 신안 및 함평, 경북 봉화 등의 지역은 과거 10년 동안 인구가 50% 이상 감소

□ 급격히 쇠퇴하는 지역과 인구 급감지역에 대한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 지속

- 이러한 지역들은 재정자립도 역시 매우 낮기 때문에 자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대체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추진

□ 광역적인 경제권역 내에서 미시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이 필요 (공간적 범위에 따른 단계별 접근)

- 산업활동의 공간적 분포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 북부와 동부지역은 지방의 산업활동 집적지역에 비하여 더욱 낙후되어 있음

- 충청권의 경우도 충남 남부 및 서해안 지역과 충북 북동부 지역은 낙후도가 심함

-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 또는 충청권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낙후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중앙정부는 초광역적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에 주력

□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초광역 단위의 입지정책을 담당

- 광역 인프라(항만, 공항, 고속 교통망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산학협력체제(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개편 등)

- 낙후지역 지원 정책, 환경 보전, 기업 규제 개선 등

□ 특정 지역의 기업유치나 입지 경쟁력 제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지활용과 관련된 정책 등 해당 지역에 한정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
  · 토지이용규제, 세제 감면,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인력 교육 및 훈련, 교통 및 통신, 전력 및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 산업단지 조성, 창업보육센터 및 아파트형 공장 등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방안』, 200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04.
김영수,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방안”, 산업연구원, 2004.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4.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2004.
소진광, “산업입지이론”, 대학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지역경제론』, 서울 : 보성각, 1999.
주택은행, 『주택가격지수』, 2003.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통계』, 각 년도.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보고서』, 2003.
-----, 『지역경제 통계분석』, 각 년도.
-----,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200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현황』, 2004.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자립도』, 각 년도.

Porter, M., 『경쟁론』, 김경묵·김연성(역), 서울 : 세종연구원, 2001.
Roger, H., *The Dynamics of Industrial Location: the Factory, the Firm and the Production System*, John Wiley & Sons, 1998.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넷 홈페이지 (2004. 10)